

Weekly 공감

2009 07.08 No.19(통권 120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중점기획 **2조원 투입… 확 달라질 하반기 서민정책**

하늘길 지키는 김포공항 관제사 24시

88년 만의 통행혁명, 우측보행

세계문화유산 된 조선왕릉 관람 가이드

공교육 혁명으로 사교육 이긴다


4江의 기적
강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회복의 강
녹색성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창조의 강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만나는 소통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물부족·물오염·물난리 없는 4대강 살리기로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물 맑은 대한민국! 문화의 큰 줄기가 흐르는 옛 강의 모습 그대로
4대강이 국민 곁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교육의 희망, 학교에서 찾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학교를 찾는다.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의 바람도 들으며 학교현장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다. 그때마다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다. 교육의 희망은 공교육, 즉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학교에 자율과 창의의 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뒤처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혁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입학사정관제로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한 획을 긋는 변화다. 성적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 인성, 창의성 등을 선발요소로 하기 때문에 '1점 올리기'에 급급했던 공부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입시제도다. 해를 거듭할수록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축적되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수능 성적을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도 학교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험성적 결과 공개는 교사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피드백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로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이 확대되는 것도 큰 변화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원 인사 등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권한을 학교가 직접 가지게 돼 학교별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전원학교 등 재정지원 대상 학교가 전체 2천5백여 개로 늘어나고 독창적인 교육을 소신 있게 실천하는 학교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자율학교도 증가해 학교장 중심의 다양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개혁 또한 진행될 것이다. 교육정책은 결국 좋은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교사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교수·학습하느냐가 교육개혁의 최종 과제다. 교원 평가와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교사들의 자기계발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지식기반시대의 변화에 맞춰 낡은 교육과정을 과감히 변화시켜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리고 각자의 꿈과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변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근거인 동시에 내가 매주 학교를 찾는 이유다. G



공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최대 다수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공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다. 잘못된 사교육을 바로잡는 혁명은 공교육을 되살리는 개혁이기도 하다.

기·획·특·집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56



36

Weekly 공감

발행일 2009.7.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이 더 고생, 마음 아파”


“신문·방송 칸막이는 여론 다양성 제한”

〈Weekly 공감〉 18호(7월 1일자)에 실린 ‘이문동 시장 골목에… 대통령이 떴다!’ 기사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서민들의 바람을 담은 댓글을 모았습니다.

“저, 떡볶이가 탐스럽게 보이는데요~ ㅎㅎ. 지나가던 학생들에게도 어묵을 사주셨다는데, 그 학생들 참 부럽습니다.^^ 계속 서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세요.”_ 두루누리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환담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보수, 진보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빛을 보고 열정을 보니 서민을 위해 뭔가를 해내실 분이라 믿어집니다.”_ hgdnb1

“서울에 있는 지하도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으로 계실 당시 서울시의회 조례에 의해 우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점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이자 수의계약을 명문화해 우리들을 살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이문동 상가를 민생탐방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골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지하도 상가도 한번 방문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이 방문하셔도 망하지 않고 훨씬 더 잘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_ madinmon

“대통령의 서민중시 정책을 환영한다.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서민들인 만큼 서민중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한낱 정치적 제스처나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직접 매상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이다.”_ opop123

〈Weekly 공감〉 18호 ‘이슈 인터뷰-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을 읽고 한 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OECD 국가 중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OECD 30개 회원국 중 10개국은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시장점유율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이들 뉴미디어 간에 쳐져 있는 법적 장막을 없애야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두뇌가 우수한 우리가 출발은 늦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미디어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고부가가치 수출이요, 녹색성장 아닌가.”_ lee2b2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 살리기 3행시 이벤트 당첨작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를 기념해 마련한 '4대강 3행시 응모'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첨된 15분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사시사철
대대손손
강변살자
–김외철(서울 강서구 가양동)

사방을 둘러보아도 금수강산
대한민국 좋고 좋구나
강강술래 손에 손잡고 목청껏 불러보자
– 채윤기(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사랑이 흐릅니다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강을 따라, 우리의 강을 따라서…
– 정인규(서울 송파구 잠실3동)

사방이 금수강산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강을 살려 더 좋은 나라
– 장효남(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4백일 하고도 6백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강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유경숙(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사막에선 오아시스가 사람들을 살게 하듯
대한민국에선 4대강이 국민을 살릴 것입니다
강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 이송애(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1리)

사나이로 태어났으니
대장부 기질을 발휘하여
강 살리기 사업에 화끈하게 동참하련다
– 이선기(서울 구로구 오류동)

사랑하고 소중한 미래의 자연을 위해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강을 살리는 데 진력합시다
– 소숙자(부산 동래구 온천3동)

사시사철 아름다운
대한민국아
강물과 함께 흐르고 번영하라
– 최웅락(인천 남구 용현2동)

4대강이 숨쉬는 날
대대손손 선진강국
강강술래 신명 나네
– 김대용(광주 북구 연제동)

사사로운 감정은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 최세영(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4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없답니다!
– 이동열(경기 하남시 신장동)

4대강아, 깨어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강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 박해강(부산 북구 만덕2동)

4대강 살리기
대안 없는 비판은 반대 위한 반대일 뿐
강성대국 동참 어때요
– 나정숙(서울 광진구 자양동)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대대손손 깨끗하고 맑은
강줄기가 되고 싶어요
– 하향숙(울산 동구 일산동)

공감 퍼즐

1		■	2		3
	■	■		■	
	■	■	4	5	■
6		7	■		■
	■	8			■
■	■	■	■	9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7월 1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로

1. 학교에서 여름, 겨울 등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것. "OO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다."
2. 공교육과 비교되는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OOO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지금보다 2과목 줄이고 학기당 이수 교과군 수도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4. 목소리로 연기하는 배우.
6.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학생의 보호자. "사교육비 줄이기, OOO가 나선다."
8. 보루, 진지, 발판 등의 뜻을 가진 말. "한 · 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OOO를 마련한 것이다."
9.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OO'의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세로

1.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진로 상담 등 다양한 과목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죠.
2.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나 그 능력. "그는 OOO이 좋은 사람이다."
3. 주로 땅 위에서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5. 길에서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공항, 항만 등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이죠. "정부는 이것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퍼센트 감소하고, 보행자 간 충돌 횟수도 7~24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자기가 다니거나 졸업한 학교. "그는 자신의 OO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Weekly 공감〉 17호(6월 24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일자리 4 생사 6 회복 8 핵우산 9 희망
세로 1 민생 3 자영업 5 사회안전망 7 중산층 8 핵심
당첨자
이재우(서울 구로구 구로1동)
김영미(경남 김해시 삼계동)
이금숙(강원 속초시 조양동)
하영화(대전 서구 선사로)
김윤주(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조영철 기자

인터넷을 달군 '대한늬우스' 논란
"광고는 광고일 뿐 오버하지 말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믹 버전으로 제작한 '대한늬우스' 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내용이어서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극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객들은 정부의 소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뜨겁다. 누리꾼들은 1970년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는 광고기법일 뿐 독재정권 부활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대한늬우스'에 나온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KBS 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시청을 거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이 같은 여론몰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옛날에 드라마 악역을 맡았던 여배우들이 동네 아줌마들에게 맞았다더니, '대한늬우스'에 출연했다고 개그 콘서트 시청 거부 운동이라니 한심하다"고 개콘 시청 거부를 선동하는 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늬우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 단위로 제작해 나라 안팎 소식과 정부 정책을 극장에서 소개했던 뉴스. 반면 이번 '대한늬우스'는 개콘의 '대화가 필요해' 코너 형식을 빌려 개그맨 김대희, 장동민, 양희성이 가족으로 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1분 30초 분량의 코믹한 정책홍보 동영상으로 '가족여행' 편과 '목욕물' 편 등 2편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대한늬우스'는 52개 극장 1백90여 개 상영관에서 6월 말부터 한 달간 상영되고 있다. 6월 29일 극장에 찾아가 관객들의 반응을 들었다.

●●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게 신선하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에 거부감은 없다. 정부의 소통 노력을 좋게 생각한다."(한지훈·25·대학생)

●●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정부 정책을 코미디로 패러디하다 보면 지나치게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싶다. 군사정권 시절에 했던 '대한뉴스'를 부활시킨 것 같아 안 좋은 느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모 씨·34·자영업)

●● "정당한 광고료를 주고 극장에서 광고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데,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박재완·34·회사원)

인터넷상에서는 '대한늬우스' 광고를 하는 극장엔 가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조용한 편이었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며 "광고 후 실제 매출에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극장을 찾는 관객들 역시 "광고를 보지도 않고 비판부터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가 극장광고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

글 · 온종림(뉴데일리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MB노믹스 추진

“현장을 찾아가 서민을 챙겨라”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정부는 민생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등 각 분야에서 서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6월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담긴 정책이다. 종합대책은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의료·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2조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를 찾은 것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멍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점상, 떡볶이집, 식품 가게를 돌며 물건도 구입하는 등 서민을 껴안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지난해 3월 3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유류세 인하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당시에 쏟아져 나왔다.

정부 출범 때부터 꾸준히 서민정책 주력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서민 껴안기’ 노력은 계속됐다. 모두 15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총 46개 안건 중 17건이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등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었다. 정부는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전체 1백17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가운데 34.2퍼센트인 40개 안건이 민생안정에 집중됐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동아DB

정부는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닥친 지난해 하반기에는 53개 중 30건에 해당하는 56.6퍼센트의 안건이 서민 관련 정책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크게 살펴보면 정부의 민생정책은 일자리 나누기와 긴급 생계지원, 주거안정으로 대표되는 서민복지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MB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자칫 복지 정책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취약계층의 보육·교육 및 주거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46만 가구 1백만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12만~35만원까지 가구원 수당 생계비가 차등 지급되는 생계구호 프로그램을 펴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도 4.8퍼센트 인상했다.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서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29조6천3백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1퍼센트 증가했다. 당초 2008년보다 3조4천7백45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2천7백45억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복지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쓰였다. 또 정부 재정 지출 중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퍼센트로, 1998~2002년의 20.8퍼센트, 2003~ 2007년의 27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도 늘렸다. 그 결과 '경제위기 극복 재정지원액' 49조6천억원 가운데 62.9퍼센트인 31조2천억원이 긴급 생계지원이나 신용대출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 감세 등에 쓰였다.

"복지와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아직 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기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는 무엇보다 저소득층 붕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하반기 이후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고충도 여기에 있다. 경제지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이를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복지와 경기부양정책 어느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이다.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돼도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 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서민을 챙기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6월 25일에도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각별히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서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쓰였다. 또 정부 재정 지출 중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퍼센트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6·30 서민생활 종합대책'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만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서민 주거 등 총 6대 분야 15개 과제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어 하반기부터는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정지연 기자

이명박 대통령, 50만 공무원에 음성메시지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둡시다"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공무원 50만명에게 보내 상반기 노고를 치하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친(親)서민' 행보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한 데 이어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민생활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반기에는 행정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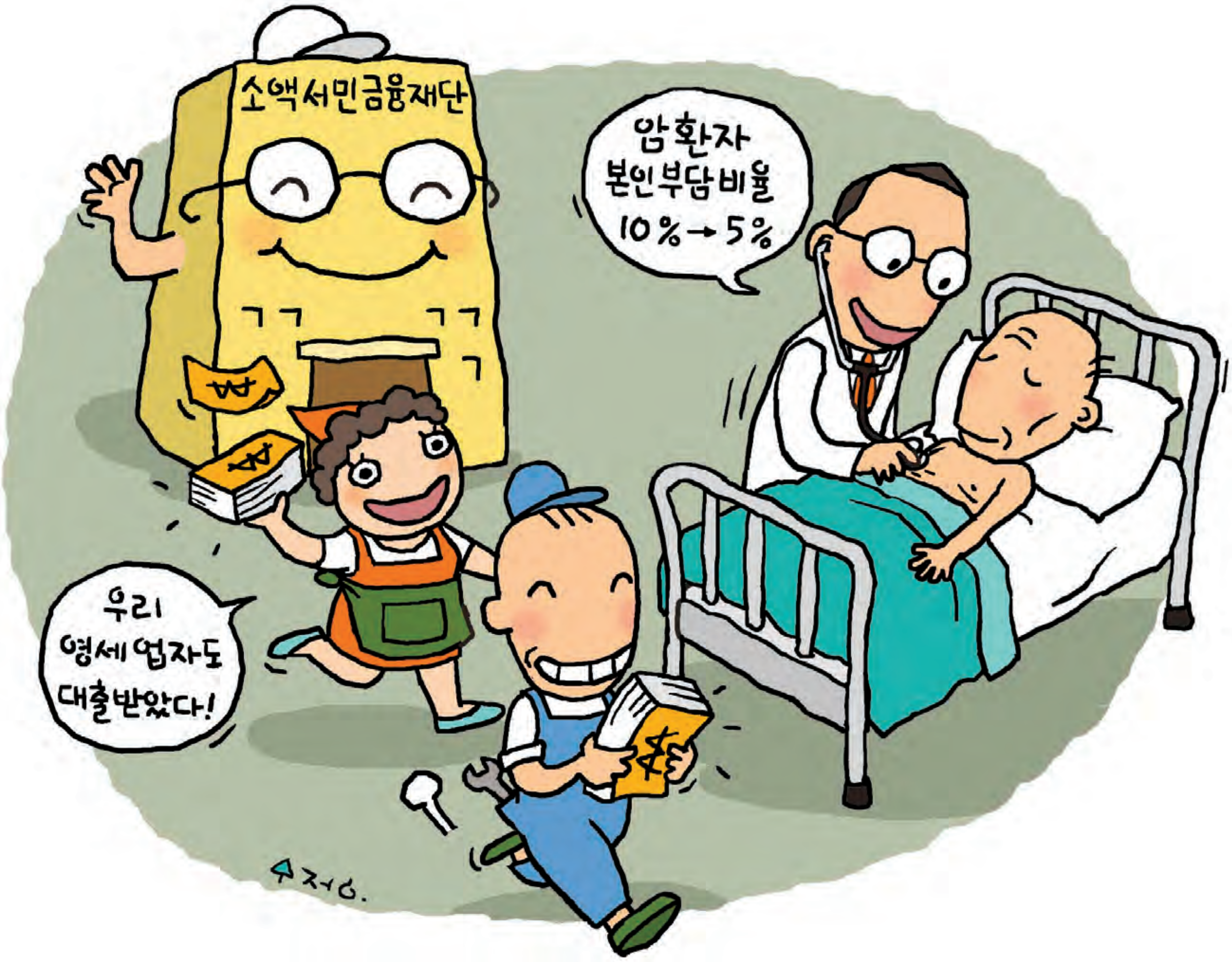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 대통령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생활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은 이 고비만 잘 넘기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큰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빌려주고 깎아주고 낮춰주고 생활여건 개선에 2조원 투입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6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서민금융 저소득 근로자 16만명에 생계비 대출 지원

박석한(55)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청과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을 받아 수서역 인근 현대벤처빌딩 지하 식당가에 순대집(수라참웰빙순대)을 열었다. 10여 년 전 화재사고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 장애 2급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해 온 그는 정부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을 대여하고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진행하는 희망드림뱅크가 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연 20억원이던 희망키움뱅크 예산을 3백30억원으로 늘렸으며,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백71억원이던 예산을 4백4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서울시는 60

서민 학자금 대출 이자가 최대 1.5퍼센트 포인트 낮아진다.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해 직접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대출 이자를 1~1.5퍼센트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에서 3분위까지 확대한다.

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을 3백 곳으로 늘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창업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자활금융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 씨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게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신용 7~9등급의 근로소득자(비정규직 포함)로, 지원조건은 연리 8.4~8.9퍼센트, 3년 또는 5년 상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중앙회에 1천억원을 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협(6월 30일), 농협, 우리은행(7월), 국민은행(8월)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에게는 총 3조4천억원의 추가 보증지원을 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당초 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은 당초 1천억원에서 1조2천5백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영세자영업자 약 19만3천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약 40만8천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이 9~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사업자확인증 등의 서류를 갖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5백만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는 3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 지원 |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신미진(30) 씨는 7월부터 아들의 어린이집 비용 33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0~4세 영·유아의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퍼센트(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월 인정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백58만원 이하)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씨처럼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는 대상이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 하위 50퍼센트 초과~79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60~30퍼센트의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그동안 보육료 지원은 보육기관에 했지만, 9월부터는 전자 바우처(i-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정부 지원을 한결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 이하의 0~1세 아동 11만명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 밖에 서민 학자금 대출 이자가 최대 1.5퍼센트 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학자금 대출 재원 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현재 7.3퍼센트 수준)가 높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해 직접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대출 이자를 1~1.5퍼센트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에서 3분위까지 확대한다.

의료복지 확대 | 1년간 50만명에 보험료 50퍼센트 경감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역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50만 가구의 보험료를 50퍼센트 경감해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각기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든다.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게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예산을 5백15억원에서 1천5백33억원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와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9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는 한방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5~14세 어린이들의 어금니 홈을 메워주는 충치 예방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의원은 소득이 적은 노인층 이용률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양방 병원에서 받는 물리요법은 보험 적용이 돼 양·한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어금니 홈 메우기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높은 충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확대 |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낮춰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셋을 둔 김미희(43) 씨는 오는 8월부터 월 7천원가량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됐다. 정부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20퍼센트 할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아DB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소액 대출 및 지원사업이다.
사진은 대구 동구 방촌동의 '희망가게 41호점'.

또 아직 전세를 살고 있는 김 씨 가족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더 커졌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되고, 우선공급 물량 5퍼센트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도 우선공급 물량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고, 15퍼센트의 일반공급우선권을 신설해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임대료(시세 대비 48~68퍼센트)를 일반가구(시세 대비 57~81퍼센트)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높아지고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저소득 가구의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수도용 자재로 사용이 금지된 아연 도강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녹물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구당 2백만원 정도의 개량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 보호 | 대기업 슈퍼마켓 입점 시 사전조정제 도입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골목상가를 둘러보고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많은 상인들이 "인근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들어선 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처럼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7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전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 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되며 합의 실패 시에는 시도 지사가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사용한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에 전액 상환토록 했으나 7월부터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보하고, 지자체의 2차 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 시까지 인정하며, 지역 이전 시 일시 회수하는 지자체 자금을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휴·폐업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재창업 등 자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83종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 중이다. 그러나 지역 단위 상품권은 통용 범위가 한정되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완해 7월부터 전국을 통용 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다. 올해 1백억원어치 1백30만 장의 5천원권과 1만원권 상품권이 발행되고 6백여 개 시장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취업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작은 출판사에 다니다가 지난 2월 실직한 김은경(46) 씨는 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경기가 어려운 데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뜻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 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는 '역사체험학습지도사' 과정을 마치고 파트타임이지만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김 씨처럼 취업을 원하는 실직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는 새일센터를 기존 50곳에서 72곳으로 늘리고 직업훈련과정을 1백51개에서 3백35개로 확대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일센터가 확대되면서 교육훈련 대상도 3천5백명에서 8천명으로 많아질 뿐 아니라 새일센터에서 고용하는 주부인턴사원이 1천명에서 3천8백80명으로, 취업설계사가 2백50명에서 3백60명으로 늘어난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층 지원대책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시행 시기	문의
서민금융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 3백 곳으로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하반기	금융위원회(02-2156-9851)
	저신용 근로자 5백만원 한도 대출지원	신용 7~9등급 근로자	7월	중소기업청(042-481-4385)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7월	
보육·교육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 이하→소득 하위 50% 이하)	소득 하위 50% 이하	7월	보건복지가족부(129)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신규 지원	차상위 이하 가구	7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9월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11월	
	학자금 이자율 인하(1~1.5%p 인하)	대학(원)생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02-2100-6274)
	무이자 학자금 대출 소득 하위 20%→하위 30%까지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2학기	
의료복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20%→10%)	희귀난치성 질환자	7월	보건복지가족부(129)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암환자	12월	
	지역보험료 50% 경감(1년간)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	7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 (15%→1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6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 인하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6월	
	긴급복지 대상 확대(4만→9만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6월	
	한방 물리치료, 아동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 적용	5~14세 소아 등	12월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7월	
주거복지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3%→5% 확대, 우선공급 물량 5% 추가 배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3%→10% 확대, 일반공급 물량(전체의 15%) 우선권 부여	3자녀 이상 가구	9월	국토해양부(02-2110-8246)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8월	지식경제부(02-2110-5544)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3곳 추가 지정(2곳→5곳)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	7월	국토해양부(02-2110-8246)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7월	환경부(02-2110-6879)
	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화장실 신축·개량	밀집 서민거주 지역 거주자	하반기	국토해양부(02-2110-8271)
영세상인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 종사자	7월	중소기업청(042-481-4484)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	7월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인	7월	
여성	새일센터 및 직업훈련과정 확대	경력단절 여성	7월	여성부(02-2075-464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KTV '정책대담' 출연

"서민·중소기업은 세제상 우대하겠다"

정부가 6월 30일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민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실업대란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중점 과제들은 무엇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7월 2일 윤 장관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사회 각 분야의 패널들과 함께했다. 이날 진행은 송지헌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문병근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이용탁 보도국장, 대전일보 최문갑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먼저 패널들의 질문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집중됐다. "일각에서 서민과 정부가 느끼는 고통의 체감 정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과연 서민생활 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윤 장관은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서민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금융전담반을 네트워크로 조직화해 영세자영업자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서민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이나 대기업의 자발적 출연도



송지헌 아나운서(가운데)가 진행하고, 윤증현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7월 5일 방송됐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관련 사전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대해 최문갑 논설위원은 "사전조정협의회가 있다고 영세 유통업자들의 위기감이 해소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한다면, 대형마트나 중소 유통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며 정부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살리기, 결국 서민에게 혜택 갈 것"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정지원과 비교해볼 때 민생안정과 복지재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은 서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간 2조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던 재해 복구 예산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서민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용정책'에 대한 토론도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투입된 재정 규모에 비해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윤 장관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말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자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도 유동성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탁 보도국장이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 중인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안을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는 등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아직은 DTI와 LTV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지만 국민 통합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대담을 마무리 했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DTI 4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 시가 대비 대출금액 비율.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LTV 40퍼센트로 규제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노력"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보다 0.1퍼센트 성장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됐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희망적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인 경기 지표들은 보이지만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주력 시장인 선진국들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낙관만 하기엔 불안 요소가 아직은 많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은 지속될 예정이다. '출구 전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말해 위기 이후를 위한 대비 역시 소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 최근 IMF가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내년에 −4.7퍼센트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러자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8년 30.1퍼센트에서 올해 35.6퍼센트로 뛰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미국(2백 퍼센트)이나 다른나라에 비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며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자 감세'를 '서민 감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세제상 우대를 유지하고, 세금을 더 걷는 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21세기 경제 실크로드 –
경인 아라뱃길이 흐릅니다
어기여차!
경인 아라뱃길
ara
국토해양부
K water

기획특집

날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달 학원비, 교습비를 낼 때마다 아이는 부모에게 미안하고, 남들만큼 못해주는 부모는 '못난 부모'라는 자괴감에 빠진다. 한국인의 DNA에는 분명 뜨거운 교육열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빗나간 교육열에서 파생된 사교육 팽창과 사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한 번쯤 겪어야 하는 열병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최대 다수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공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다. 잘못된 사교육을 바로잡는 혁명은 공교육을 되살리는 개혁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일러스트 · 이우정

두 아이 학원비 합치면 한 달 1백만원

사교육에 휘청이는 대한민국

#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김미영(39) 씨.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한 달 사교육비는 학습지 8만원, 피아노 교습 11만원, 영어 25만원 등 44만원이다.

"주변을 보면 다른 가정에 비해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수준' 이죠."

#2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이화(41) 씨.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의 한 달 사교육비로 영어 24만원(교재비 2만원 별도), 수학 14만원, 합기도 7만원 등 47만원을 쓴다.

"맞벌이다 보니 방과 후에 아이가 시간 보낼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찾게 돼요."

#3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이은주(47) 씨. 고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은 인터넷 강의 수강에 월 10만~15만원을,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들은 영어와 수학에 각각 20만원씩 월 40만원을 쓰고 있다.

"큰애는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다녀서 사교육비가 아주 적게 들어요. 내년에 이과 계열로 가려는 둘째 아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과학탐구 특강을 들어야 해서 다음 달엔 1백만원은 써야 할 것 같아요."

#4 서울 노원구 중계동 강희영(46) 씨. 고등학교 2학년 딸의 한 달 사교육비가 영어 20만원, 언어 13만원, 수학 26만원 등 59만원이다.

"수강 인원이 1백명이 넘는 대형학원 단과 강의를 듣고 있어서 그나마 나아요. 수강 인원이 적은 단과학원에 다닐 때는 한 달에 80만원쯤 들었어요. 과외요? 우린 안 하지만 대입전문 과외선생을 부르면 보통 1백만원대죠."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는 다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대부분 가정에서 사교육비는 커다란 부담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 가정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9천95억원으로 2007년의 20조4백억원보다 8천6백95억원(4.3퍼센트)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 이전의 사교육비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2001년 10조6천6백34억원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6천4백85억원, 2005년 17조6천7백74억원으로 늘어나 2001~2006년 사이 연평균 12.1퍼센트씩 증가했다.

소득과 비교해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이 더 크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행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실린 '경기하강에 취약한 우리의 소비 구조'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고소득층(소득수준 상위 20퍼센트)이 4.3퍼센트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저소득층(소득수준 하위 20퍼센트) 4.6퍼센트, 중산층(소득수준 40~60퍼센트) 5.6퍼센트였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통계 수치 이상' 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전은주(37) 씨 가정은 아들(4)의 어린이집 비용으로 42만원,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영어, 수영, 생태교실 수업료 등으로 매달 66만원의 사교육비를 쓴다.

"두 아이 사교육비를 합하면 1백만원이 넘어요. 우리 가정 수입의 4분의 1가량이죠. 요즘은 우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이에요."

투자 대비 효과가 정비례하다면 사교육도 해볼 만하다. 문제는 상당수 사교육이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 교육으로 진행돼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하고 정형화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 결정돼

한 예로 서울대가 발표한 2007년 정시모집 합격자 논술점수 분석 결과 사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군(郡) 출신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23.58점(25점 만점)으로 서울(23.42점)과 광역시(23.41점) 출신보다 높았다. 서울대가 합격자 논술 점수를 처음 발표한 2006년에도 군 출신 평균 점수(23.52점)가 서울(23.49점)보다 높아 '강남식 사교육' 이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력 기르기에 밀린다는 것을 보여줬다.

학업성취도에서도 대도시 출신보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역균형 선발 학생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서울대를 졸업한 2천9백6명(지역균형 84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입학 전형별 평균학점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균형 선발 학생들의 평균학점이 3.55점으로 졸업생 전체 평균 3.34점보다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통계청의 '2003~2008년도 상반기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수준 상위 10퍼센트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8만1백92원으로 하위 10퍼센트 계층의 월평균 지출액 7만4천1백93원보다 무려



공교육만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가 와야 한다.

7.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퍼센트에 달한 반면 하위 10퍼센트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퍼센트에 그쳤다. 이 밖에도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가중된다는 사실과 학력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동안 모두의 이해를 충족하려다 보니 사교육비 팽창만을 불러왔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이 원하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공교육 중심의 '교육혁명'이 이뤄지고 '가짜 교육'은 정리돼야 한다."

당시 통계청 자료를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저소득층은 의료비, 난방비, 상수도비 등 생활비 지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점차 줄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교육 투자비가 줄어들면 결국 학력의 세습에 따라 고소득자와의 소득 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영철 기자

내신과 수능으로 이원화 된 교육제도로 인해 아이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린다.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수준, 나아가 미래의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사교육비는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축인 중산층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도 바로 '대물림'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권수현(46) 씨.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 남매를 키우는 그는 2년 전 분당으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두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가 1백50만원이 넘어요. 우리 집 생활비의 3분의 2를 차지하죠. 말 그대로 허리가 휘어요."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자도 아니고, 자녀가 중산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모도 아이도 교육에 '올인'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던 서울 도곡동에 살 때보다 중산층 주거지인 분당에 사는 지금이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권 씨는 중산층 밀집지역일수록 내신 경쟁이 심하고 사교육 열풍이 드세다고 전했다.

"분당에서도 내신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내정중학교나 수내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과목별로 '두세 문제만 틀려도 전교 꼴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공교육은 수준이 낮고 아이들 간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사교육비 줄이는 최고의 해법은 '공교육 살리기'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는 많은 전문가들에게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학교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학교 시험은 변별력을 갖기 위해 어렵게 치르다 보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내신 대비 학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특목고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다양하고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을 뽑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최상위 학생만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변질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 특히 내신, 수능, 면접, 논술 등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은 과거 학교에서 해주던 입시상담까지 사교육과 사설 상담실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대비해야 하는 이원화된 교육제도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사교육비도 더 크게 부풀린다.

입시전형과 사교육의 상관관계를 보자. 특목고의 일반전형 확대로 내신에서 영어와 수학이 중요해진 지난해 영어 사교육비는 매월 7만6천원(11.8퍼센트), 수학은 매월 6만2천원(8.8퍼센트) 증가했다.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반영 비중이 갈

동아DB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록 커지는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초중고생 응시자 수는 2007년 한 해에만 58.5퍼센트 급증하기도 했다.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그간 가장 극적인 사교육 대책이 1980년 발표된 과외 전면 금지였다. 하지만 일부 상류층의 고액과외만 부추기며 사실상 실패했다. 그때 생긴 용어가 '몰래바이트'다.

막대한 사교육비 '출산율 저하'로까지 이어져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교육방송(EBS)의 위성방송 강의로 과외 수요를 충족시키려 했으나 한쪽에선 수천만원대 고액과외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교육 영역만 키우는 부작용을 불렀다.

사교육 시달림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기러기 아빠'가 일반화됐다. 허리 졸라매고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아이를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할 바에야 '더 나은 교육환경'이 있는 외국으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유학 보내는 가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러기 아빠들 가운데에는 자녀가 학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가족이 재회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지내다 돌연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 간에 생긴 간극을 뛰어넘지 못해 비극적인 가족해체의 길을 걷기도 한다.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높은 사교육비 등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인규 대표는 "그동안 학원, 교원단체, 대학 등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며 모두의 이해를 충족하려다 보니 내신 강화 주장에 내신 관련 학원이 늘고, 수능 강화 논리에 수능 관련 학원이 증가하는 등 사교육 팽창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이 원하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공교육 중심의 '교육혁명'이 이뤄지고 '가짜 교육'은 정리돼야 한다"며 "정권을 넘어설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교육정책을 세우고 이를 맡아 운영할 책임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품앗이 교육 · 엄마표 과외로 똑소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월소득의 2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아래 가계가 멍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광풍 속에서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우등생을 만들려는 부모들의 노력이 뜨겁다.



조영철 기자

고액 과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사진은 보라매 모여라 북클럽 수업 모습.

주부 김은숙(46·서울 하계동) 씨는 가계부 들여다보기가 무섭다. 사교육비 부담 탓이다. 고1, 중2 두 아들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과외비가 월 1백50만원이나 된다. 생활은 늘 빠듯하지만 교육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웃집 따라가기도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사교육 광풍에 온 국민이 허덕이고 있다. 욕심껏 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교육.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오죽하면 '한국식 사교육'을 해외에 수출하자는 말까지 나올까.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초중고생의 전체 사교육비는 20조9천95억원으로 전년도의 20조4백억원보다 4.3퍼센트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른 것과 비례해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5퍼센트나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소득의 2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또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고 특히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월평균 1백만원이 넘는다.

숨 막히는 사교육은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창 자라야 할 아이들을 초주검이 되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 김해찬(17) 군은 고교 진학 후 아침 6시쯤 일어나 7시 이전에 집을 나선다.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직행한다. 학원을 마치고 나면 자정이 넘는다. 새벽 별 보고 나가 달밤에 귀가하는 강행군에 지쳐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학생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우등생을 만드는 비결은 없는 걸까? 교육의 질은 두 배로 높이고 교육비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과외비 부담, 엄마가 해결한다

고액 과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엄마표 교육이 그것. 미술 등 예능에서부터 한글, 독서지도, 유아 영어, 수와 셈 등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엄마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학습재료를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솜씨는 아니어도 아이의 성향과 기호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우리집 학교 엄마 선생님(cafe.naver.com/teachermommy)'의 운영자 박자연(31)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한글 교재를 만들고 퍼즐도 제작했다. 박 씨는 "소극적이던 아이가 금세 학습에 흥미를 붙이게 됐다.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교재와 학습법이 큰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엄마 회원 1만2천명은 매일 아이를 위한 장난감과 교재 만드는 법을 카페에 올리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상위 1% 만드는 통합공부법〉의 저자 김유강 씨는 직접 두 아이의 교육 컨설턴트가 되어 학습 전략을 세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11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아이들 육아문제로 전업주부가 됐다. 그의 인터넷 카페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학습법(cafe.daum.net/eduhow)'에는 한 수 배우려는 엄마들로 북적댄다. 차분하고 꼼꼼한 딸과 덜렁대는 아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과 함께 최소한의 사교육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관심을 끈다.





인터넷 카페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학습법'(왼쪽)과 '우리집 학교 엄마 선생님'.

'품앗이 교육'을 아시나요?

'품앗이 교육' 열풍이 경기 불황을 타고 불고 있다. 사교육비에 힘겨워하던 엄마들이 의기투합, 이웃과 힘을 합해 극복해보겠다는 전략에서다.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는 또래 자녀들의 엄마들이 영어, 수학, 피아노 등 각자 전공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엄마들끼리의 친목 도모는 보너스다.

기간을 정해 과목별로 교과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수업마다 교육 후기를 나누는 것이 탄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입소문을 타면서 품앗이 교육은 피아노, 미술 같은 예능교육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야외체험을 함께 하는 품앗이 모임에다 어린이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연극, 마당극을 미리 관람하는 학부모 온·오프라인 모임까지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보라매 모여라 북클럽(cafe.daum.net/dongwha book)'도 뜻을 같이하는 동네 엄마 7명이 앞장서 만들었다. 수줍음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 외동아들을 둔 신현주(44·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씨가 아파트 단지 안에 전단지를 돌렸고 이를 보고 모인 학부모들이 뭉쳤다. 이들은 직접 자녀의 책읽기를 돕고 교육 커리큘럼,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챙긴다. 2006년부터 시작해 지난 4월 1백회째 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콘텐츠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몰려 평택, 대전, 제주는 물론 미국, 중국에서도 북클럽이 결성됐다. 신 씨는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충분한 인성교육이 된다"면서 "누구보다 자녀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지도하다가 아예 교육전문가가 된 엄마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품앗이 파워(www.pumpa.co.kr)'의 운영자 강선영(36) 씨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계발과 자기 성취감으로 이어진다"고 귀띔했다.



'품앗이 파워' 사이트.

공교육의 힘을 보여라

입시학원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 위치한 '야마구치'라는 일본의 한 초등학교가 몇 해 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가게야마 히데오 선생이 '100칸 학습'이라는 독특한 수학 교수법을 도입해 일본 초등학생 대상 학력 테스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하자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됐고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사교육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에도 공교육 살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학생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서
교육의 질은 두 배로 높이고 교육비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리기의 모델로 급부상한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실험을 벌이고 있는 서울 덕성여자중학교 김영숙(57) 교장이다. 그는 2001년 덕성여고 재직 당시 서울지역 학생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내에 있는 학교의 지원율이 55퍼센트로 곤두박질치자 "교사들이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선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강화했고 우수학생 수준별 수업, 통합 논술·심층 면접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도에 나섰다. 교사들은

동아DB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거점학교인 '강감찬 학교'도 성공사례다. 이 학교는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수강생이 늘고 있다.

밤 10시까지 근무를 자청했다.

이 학교 8백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모든 공부를 해결해도 실력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피 대상이던 학교의 지원율은 올해 1백30퍼센트로 뛰었다. 7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다 지난해에는 3명이나 합격시켰다. 상위권대 진학률도 급상승했다.

이밖에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인 '강감찬 학교'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초중고교를 아우르는 거점학교로 2005년 문을 연 '강감찬 학교'는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현재 68개 강의가 진행 중이다. 거점학교란 예체능 위주였던 기존의 교육과 달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과목을 가르친다.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전국 방과후 학교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수강생 수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문부성 교육 담당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영어. 수준별 무학년제로 학력 수준에 맞춘 눈높이 수업이 특징이다. 영어 말하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과 내국인 강사가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고 iBT 토플, 텝스 등 영어인증 모의테스트도 치른다. 수업료는 일반 학원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자연히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실시 중인 '대학생 멘터링' 프로그램도 큰 비용 없이 중고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효과를 입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생 멘터'로부터 방과후 수업을 받은 부산 북구 금사중학교 재학생 전원의 성적이 급등하면서 타 지역 교육청과 대학들의 벤치마킹 움직임이 분주하다. G

글 · 허윤주 객원기자

"팀장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봅시다."

회사에 다니는 엄마가 자녀 때문에 일찍 귀가하겠다고 하면 흔쾌히 "그러라"고 답할 상사나 회사가 있을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를까, 휴가를 내면 모를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아이 때문에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건 당신 사정이고"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아니, "집에서 아주 푹 쉬라"며 책상을 빼지도 모를 일이다.

팀 플레이를 통해 이윤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직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칙을 앞세워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자녀를 맡길 마땅한 사람 혹은 장소가 없는 워킹맘, 때로는 워킹파파의 심적 부담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다.

적은 비용으로 학과시간 이후에도 학교에서 보충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기적성교육까지 시켜줌으로써 부모가 전담해야 했던 보육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느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가끔씩 직장 일로 늦어질 때면 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걱정에 안절부절못했지요.

하지만 도이초등학교를 만나 2009년부터 이런 걱정이 싹 사

공교육 모범사례 경기 화성 도이초등학교를 가다

밤 9시까지 아이들 책임집니다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에 따라서는 사교육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란 평가도 있다. 학교현장에서 이 두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도이초등학교를 찾았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부모가 전담해야 했던 보육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도이초교 방과후 학교는 지역은 물론 경기도내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라졌어요. 우리 아이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다닙니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다녀서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 2학년 조채은 엄마 김지윤

"향남에 이사 와서 1학년이 되는 아이 걱정에 직장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내러 가던 날 선생님의 안내로 안심학교를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내성적인 우리 아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이는 점점 밝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점점 안심학교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략…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다른 학교에서도 활발히 운영돼 좀 더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학년 학부모 박서연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도이초등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참여마당'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일부다. 지난해 10월 개교한 신생학교인 도이초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 '토요 틈새학교'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끌어올린 모범사례로 도이초교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본보기로 부상하고 있는 도이초교를 7월 1일 찾았다.

화성시 향남읍 택지개발지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이초교는 현대적 시설이 일단 눈길을 사로잡는다.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운동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트랙에는 우레탄이 깔려 있어 첨단을 달리는 학교라는 느낌을 준다. 교실마다 설치해놓은 대형 벽걸이TV도 인상적이다. 도이초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30분. 학과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 건물 1층 오른쪽 끝에 위치한 '도이 꿈나무 안심학교'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21명의 학생이 한데 모여 왁자지껄 뛰어놀고 있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일종의 돌봄학교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안심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교과보충학습까지 이뤄지고 있다.

학과시간 이후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모들에게 꿈나무 안심학교는 인기가 높다. 도이초교 연구부장 조미영 교사는 "재학생의 76.8퍼센트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가 많아 안심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루 두 차례 요일마다 다른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 첫 특기적성 시간에는 월요일 래덕스 게임, 화요일 어린이 요가, 수요일 북아트, 목요일 한자, 금요일 어린이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특기적성 시간에는 컴퓨터와 독서논술, 종이 접기, 동화 구연, 글자쓰기(POP) 프로그램이 요일을 달리해 운영된다.

특기적성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에 정통한 전문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강사는 나머지 시간에 취미, 예능, 과학, 체육 활동을 돕는다. 또 저녁시간에는 전담교사가 국어와 수학 과목에 대해 교과보충학습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다양하고 맞춤교육에 교육비까지 저렴해

특히 꿈나무 안심학교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테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화성시보건소를 찾아 '장애예방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받았고, 4월에는 발안도서관에서 '도서관체험'과 '로봇교실체험'을 했다. 5월에는 화성시청소년센터 하내테마파크에서 도자기공예와 비누공예 등 공예활동을 했고, 6월에는 대부도 탄도항에서 '갯벌체험'을 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꿈나무 안심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도 경제 형편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특기적성 활동비와 체험 활동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간식비 명목으로 최소 경비 2만원만 내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김송이(2학년) 어린이는 1학년인 동생 김하늘 어린이와 함께 학과시간 이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안심학교에 머문다. 송이는 "안심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어서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특기적성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원어민 영어강사가 놀이를 매개로 어린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왼쪽).

도이초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꿈나무 안심학교 외에도 학교 자체 예산을 들여 돌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체 운영하는 돌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2명의 학생이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돌봄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 보충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3층에 위치한 돌봄교실에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서로 다른 책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학습을 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는 학생들 사이를 돌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돌봄학교는 '돌봄'이라는 보육 기능에 1차적 목적이 있지만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학습'과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꿈나무 안심학교와 돌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혹은 한부모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 걱정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했던 학부모가 안심학교와 돌봄학교 덕에 마음 놓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 학교 측에 감사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인근 학교 학생에 문호 개방 '토요 틈새학교'도 큰 인기

하교 이후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자녀 더 공부 시키겠다'는 부모 욕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엄마들이 학원 등에 비용을 지불해가며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주도록 위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안심학교와 돌봄학교가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특기적성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자녀 특성에 맞는 특기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도이초교의 경우 플루트와 댄스스포츠, 컴퓨터, 종이 접기, 서예, 독서논술, 그리기, 로봇교실 등 11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이초교 추홍엽 방과후 부장은 "재학생 4백66명 가운데 약 70퍼센트의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컴퓨터와 독서논술 등 수강료가 가장 비싼 프로그램의 3개월 수강료가 6만8천원으로 학부모 부담도 최소화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느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가끔씩 직장 일로 늦어질 때면 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걱정에 안절부절못했지요. 하지만 도이초등학교를 만나 2009년부터 이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도이초교 재학생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토요 틈새학교'는 한때 참여 인원이 1백80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다.

도이초교 정혜순 교감은 "우리 학교는 돌봄과 나눔, 베풂이 있는 방과후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많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 교감은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우리 학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돼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을 올해 전국에서 3백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교원 평가제 · 입학사정관제 · 방과후 수업

아이들 잠재력 · 경쟁력 키우겠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을 금지하고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없애는 등 기존 교육정책과 비교할 때 파격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정부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 교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아DB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이어 '출산은 개고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결혼에 이어 출산까지 기피하는 풍조를 빗댄 말이다.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출산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사교육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시제도를 정착시키며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교육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방안들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국가 통제로 획일화된 틀 안에 머물렀던 교육과정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운영하게 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교육 내실 다지기 | 교과교실제 · 교원 평가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서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내실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올해 전체 중고등학교(5천2백67개교) 가운데 3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교과교실제의 가장 모범적인 도입사례가 경기 용인시 동백고등학교다. 2007년 문을 연 동백고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인 '3+1'을 도입해 상중하 3단계로 학생들의 수준을 나눈 다음 다시 최하위반을 따로 만들어 이들을 집중 지도함으로써 수학 과목의 8, 9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3월 13퍼센트에서 11월엔 8.6퍼센트로, 영어 과목의 8, 9등급 학생 비율은 13.2퍼센트에서 6.3퍼센트로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선진형' 45개교에 학교당 15억원을 지원하고 수학, 과학 또는 영어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과목중점형' 2백40~2백60개교에 학교당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교과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형' 3백50~3백70개교에 학교당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해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전국 1천3백80여 개교에 학교당 평균 5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약 5천명을 선발해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정규 수업에 배치되고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또 무료영어교육방송 EBSe(www.ebse.co.kr)를 활용한 학습서비스를 강화하며 유아와 초중고생, 학부모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시키기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이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을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탈피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체제로 바꾸고 있다.

먼저 올해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에 힘써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기관 5곳을 선정해 입학사정관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경쟁 과열과 사교육 증가 문제가 뒤따랐던 외고 입학 전형에서는 2010학년도 이후 지필고사가 금지된다. 또 과학고의 경우 2011년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과 과학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교 교과 과정을 넘는 선행학습이 필요한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 반영이 금지된다.

특히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년 입시부터 경시대회·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7~10월)과 과학창의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10~12월)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학사정관은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이 있는 현직 교사 또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학교별로 2명 이상 배치하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사교육 과열 요인의 하나이던 과학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은 2010년 대회부터 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학교장 추천 또는 학회 심사로 대체된다. 이전에는 국내대회에서 시험을 거쳐 일정 인원을 선발한 다음 국제대회 참가자 최종선발 시험을 치러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국제대회에 출전해왔다.



조영철 기자

즐비한 학원 간판들이 '학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추진 중이며 학원비 수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원비 초과 징수, 미신고 과외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올림피아드 응시자 수는 2004년 중학생이 5천33명, 고등학생은 2천2백5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중학생 3만6천1백46명, 고등학생은 1만6백2명으로 급증했다. 올림피아드 사교육 규모는 중학생이 3천2백억원, 고등학생이 6백1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수학습센터 등과 연결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 학부모를 학교 코디네이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천 개를 육성하고 방과후 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4분의 3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전국 4백 개 초중고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5천만원씩 총 6백억원을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10년 6백 개교, 2011년 8백 개교, 2012년 1천 개교로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해 교육 서비스를 높이고 맞벌이 가정 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위해 '엄마품 멘터링제'도 도입된다.

EBS 수능 강의도 스타강사를 영입하고 대입자율화에 대비한 수능·수시 강좌를 확대하며 기초, 보충, 심화로 세분화된 수준별 강좌를 개발한다. 또 전국의 교사와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재 공모제'를 실시해 우수 집필자를 확보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상위권 학생을 겨냥한 최고 난이도의 교재 제작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 '학원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불러온 학원들의 교습시간은 시도 자율로 단축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중고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밤 10시까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추진 중이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학원비 수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원과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 징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동아DB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은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그동안 여권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방안 가운데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두 과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고1 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당정청 합의에서 제외됐다. 대학입시의 조기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고1 수업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노경원 사교육대책팀장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방안"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온 학교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진학지도에 어려움 느끼세요?
'대입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수시1, 수시2, 정시, 특별전형, 일반전형, 구술, 배치표…. 이런 용어의 뜻을 잘 안다면 당신은 수험생 부모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각 대학의 입학시험 전형 유형과 전형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 선택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데 착안, 오는 9월부터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 상담센터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등 15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대입상담 교사단은 고교 진학부장과 고3 담임 경험자를 우선 채용,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전화 상담과 온·오프라인 상담을 맡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온라인 상담은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를 통해 진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또 매년 11월 말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 상담을 해준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72개 대학이 참가, 학생과 학부모 5만여 명이 방문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온라인 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학상담, 전문가 기획상담, 예약상담 서비스를 해준다. 문의 02-6393-5200.



정경택 기자

7월 1일 서울 이화외고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시도교육청별 진학지도 온라인 사이트

서울	www.jinhak.or.kr	강원	kwodts.com
부산	jinhak.pen.go.kr	충북	www.cbe.go.kr
대구	www.daegujinhak.or.kr	충남	www.edus.or.kr
인천	www.ice.go.kr	전북	jinro.jbedunet.com
광주	jinhak.gen.go.kr	전남	jinhak.jne.go.kr
대전	www.edurang.net	경북	kbejinhak.net
울산	jinhak.use.go.kr	경남	jinro.gnedu.net
경기	jinhak.goedu.kr	제주	jinro.jj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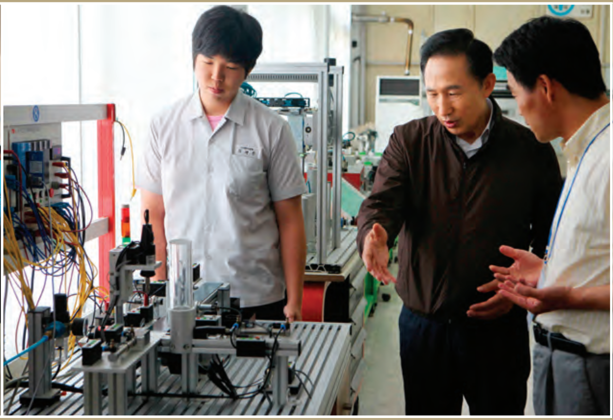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 원주정보공업고 '마이스터고' 간담회

"사교육비 고통, 청년실업 꼭 풀겠습니다"

최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에서 희망 찾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대변하는 '마이스터고'가 바로 그것이다.





원주정보공업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고 있다(왼쪽). 생산자동화실을 둘러보고 있는 이 대통령.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 대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강원 원주정보공업고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지난해 83.8퍼센트에 달했던 높은 대학진학률을 ‘살인적 사교육비와 청년실업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정보공업고 등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21개교 교장과 학생, 협약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 육성해 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평생취업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와 청년실업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산업체, 지자체의 합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마이스터고 제도를 예로 들며 “독일은 마이스터고 성공으로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대학 다니지 않고도 오히려 대학 졸업자보다 존경받고, 수입도 더 낫고, 평생 전문분야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때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독일에서 보고 온 후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해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마이스터고”라며 “이것이 성공하는 날 우리는 선진 기술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면 마이스터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졸업과 동시에 안정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이스터고 운영에는 우수교사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관련 기업이나 산업체 출신 교사들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 학교 발전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설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1백 퍼센트 취업은 안 된다 해도 졸업 후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취업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이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란 기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지역 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교사, 교재, 장비, 연수 등을 지원받고 졸업생의 우선 취업도 보장받는다.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2월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정부로부터 21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2010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계고 발전을 위한 선도 모델이 되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내년 1월 35개교, 2011년에는 5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주정보공업고에서 의료기기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원주정보공업고는 지역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원주시청, 지역 산업체 22곳과 모범적인 산학협력(70명 취업 약정)을 이루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원주의료고교(가칭)’로 개교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마이스터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등록금도 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원주정보공업고 방문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을 기점으로 시작된 서민 챙기기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원주정보공업고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자율배식으로 점심을 들며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를 통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도 대학에 가고, 기술을 익혀 취업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라며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학생, 기업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

"방과후 영어 무상교육 등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해 당과 정부, 국민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며 정책 코디네이터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경택 기자



"서민들이 사교육비가 정말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달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다. 이 대통령은 6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사교육시장 규모가 21조원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 사교육은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교육비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교육 해결은 이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민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묘수 찾기'에 분주하다. 여의도연구소가 6월 26일 개최한 토론회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연구소가 한나라당 정책을 생산, 조율하는 싱크탱크인 데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 대책'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안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 대폭 제한' '대입 전형 시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원 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방과후 영어 무상교육 추진'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확충 및 특목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 등을 제시했다.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 부소장의 안은 좀 더 직접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7대 긴급 대책'을 포함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도 6월 3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수능과목을 두 과목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여의도연구소가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경감대책 노력에 기폭제를 제공한 셈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여의도연구소장에

취임한 후 만든 첫 작품이다. 진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그는 "사교육이 번창해서 공교육이 더욱 부실해지는 수십 년 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을 텐데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를 가장 먼저 연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어젠다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수렴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의 심각성을 체험한 일이 있나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교육비와 씨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 아이는 학원에서 밤늦도록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학교는 나 몰라라 했죠. 그때 우리 교육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범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한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학벌주의 세태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른바 일류대 입학을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열을 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해 가난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공교육이 그만큼 뒷받침하지 못해서입니다.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을 번창시키고, 그만큼 공교육 불신이 심화돼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공교육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명문대 진학 중심의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재와 같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일상화된 대학 서열화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대학은 기초학문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사립대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담당하게 해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6월 26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을 번창시키고, 그만큼 공교육 불신이 심화돼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 공교육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입니다.
> 이들을 위해서도 공교육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학교교육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된다면 학교 밖을 벗어나 사교육시장을 전전해야 하는 이유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상호경쟁이 아닌 자기주도로 공부하고 자기 자신과 경쟁해 학습능력을 키우는 자기경쟁학습시스템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안이 확정되기까지 당내 조율, 당정 조율, 여야 조율, 국민 합의 등 할 일이 많은데요.

여의도연구소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 교육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당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 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2010 대한민국 보행 혁명

우측보행 시대가 열린다

1921년부터 88년간 유지돼온 좌측보행 문화가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으로 바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측보행을 시행할 경우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충돌 횟수와 보행 밀도는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선 진입 차량과의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여러 노선이 만나는 지하철 환승역은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른다. 개표구는 물론 통로 곳곳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어깨를 부딪히기 일쑤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곳을 빠져나오면 좌측통행을 지키는 사람들과 몸이 편한 대로 우측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뒤엉키기 십상이다. 서로 엇갈려 걷는 통에 마음은 바쁜데 발걸음은 자꾸 더뎌진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88년간 뿌리내려온 좌측보행 문화를 우측보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경향닷컴이 KTF 휴대전화 사용자 중 20대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퍼센트가 우측보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 이들 중 74.9퍼센트가 안전을 고려한 보행 편의를 들었으며, 14.2퍼센트는 국민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우측보행에 힘을 실어줬다. 좌측보행이 일제시대 잔재라는 이유를 꼽은 사람도 9퍼센트나 됐다.

15년 동안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 황덕수 본부장(유한대학 겸임교수)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측보행이 시행된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우측보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상 등 모든 경기는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적 발달특성이 좌측을 중심축으로 우측 팔다리에 유연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특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우며 글로벌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우측으로 통행하는데 우리는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게 되어 충돌(Conflict)이 생깁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좌우 구분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현대사회는 많은 사고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기에 쾌적한 보행환경이 절실합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통행 방향이 바뀌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체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횡단보도 통행 방향과도 일치해 교육하고 지도하기도 쉽다"고 덧붙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행자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 안전, 국제 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과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왔다. 우리나라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해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보도와 지하철역 보행통로, 심지어는 학교와 유치원 복도에서까지 좌측통행을 관습적으로 지켜왔다.

이 때문에 우측보행 기준으로 설치된 회전문이나 공항 출입구,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좌측으로 다닐 경우에는 보행자 간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시설 우측통행 맞춰 바꾸고 안내판 설치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으로 바꾸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행 안전과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지하철역이나 공항 같은 시설물 내 환승통로, 산책로, 보도는 모두 우측보행으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한해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마주보고 걷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을 권장하고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오는 10월부터 우측통행에 맞게 바뀐다.

이와 함께 통행 유도시설도 개선된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지하철 개표구 등의 기존 시설 중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시설은 우측통행에 맞게 바뀌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만들어진다. 아울러 지하철역(6백16개소), 기차역(3백27개소), 공항(18개소), 터미널(30개소), 산책로, 등산로 등 교통시설물과 공공시설에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내판 및 안내표지가 부착된다.

교과서 수정 등 어린이 · 장애인 홍보도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는 2007년 9월 착수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교통운영기관을 비롯해 도시계획 · 교통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이를 담당한 한국교통문화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은 교통사고 노출 우려가 크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공항과 지하철역 출입구,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 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행문화 개선에 따라 우측통행 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 심리적 안정감, 보행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박사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6배 많다. 오른손잡이는 신체 특성상 우측으로 회피하거나 행동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측보행이 인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신체반응 특성실험과 모의실험을 통해 우측통행이 좌측통행보다 심리적 부담감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선 지금처럼 차를 등지지 않고 마주보며 걷는 대면통행으로 전환하면 교통사고가 20퍼센트 감소하고, 우측통행을 하면 심리적 부담도 13~18퍼센트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동자의 움직임은 15퍼센트, 정신부하는 13퍼센트, 심장박동수는 18퍼센트가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우측통행으로 전환했을 경우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분석한 결과 보행 속도가 1.2~1.7배 빨라짐과 동시에 충돌 횟수는 7~24퍼센트, 보행 밀도는 19~58퍼센트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보행문화 개선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데 이어 단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행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알리기 위한 계획도 세워놓았다.

홍보는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어린이,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세부 실천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광고쪽지를 배포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안내방송과 토론회를 하는 등 국민의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측보행에 맞게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조성태 사무관은 "오는 10월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 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 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우리나라 좌측통행의 역사

일제 강점기 '좌측통행령' 관습으로 굳어져

1903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황제전용어차를 들여왔다. 이를 계기로 1905년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 경무청에서 내놓은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21년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방식을 도로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은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좌측통행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1946년 미군정은 차량의 통행 방식을 우측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 · 제차 및 보행자의 통행규칙)했지만 사람은 그대로 좌측으로 다니게 했다. 정부는 1961년 말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의 이러한 규정은 엄밀히 말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한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한 보도는 물론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에도 좌측통행의 원칙이 관습적으로 적용돼왔다.

우측보행하면 알파파 “왕성”

〈뇌파〉

지금처럼 우측 및 좌측통행이 혼재하는 시스템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차량 주행 때와 같이 많은 시설에서 시행 중인 우측통행으로 보행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측보행과 우측보행 중에서 어느 것이 인간의 신체 특성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중 어느 쪽이 인간의 신체 특성과 부합하느냐는 질문만큼 난해하다. 일단 사람은 우측이나 좌측 중 힘이 센 근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행 관련 행동 특성을 선천적인 신체 특성과 연결지어 파악하려는 시도는 자칫 잘못하면 비과학적인 가설에 근거한 주장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래서 보행에 관한 신체 특성 연구에서는 좌측과 우측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보행 방향이 일정할 때와 혼재할 때 심리적, 생리적 불편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늘 같은 방향으로 다닐 때와 달리 가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인체에 불편함을 준다면 보행 방향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명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



정경택 기자

우측보행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보행 방향이 바뀔 때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정신적 부담도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의 우측 및 좌측보행이 혼용되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에서는 우선 사람의 뇌파, 심박수,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행 방향의 선호도를 알아봤다. 즉 보행 방향을 혼용하는 그룹(현행 보행문화)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걸어 다니는 그룹(우측보행)을 비교한 것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 각 2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통행 방향을 혼용할 때보다 우측보행을 일관되게 유지할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인 알파파가 99퍼센트 신뢰 수준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행방향 통일’ 꾸준한 교육과 홍보해야

심박수 실험에서도 보행 방향이 바뀌면서 심박수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행 방향을 혼용할 때가 우측보행을 일관되게 유지할 때보다 긴장과 흥분상태를 고조시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90퍼센트 신뢰 수준). 또한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도 우측보행을 일관되게 유지할 때보다 보행 방향을 바꿀 때 주변을 더 많이 살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퍼센트 신뢰 수준). 추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정신적인 부담이 크냐는 설문에서도 보행 방향이 바뀔 때가 부담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90퍼센트 신뢰 수준).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좌측 및 우측보행이 혼재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 방향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회전문 우측통행, 에스컬레이터 좌·우측 혼용, 등산길 우측보행, 자전거 우측통행, 공항 자동문 우측통행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차량의 우측주행을 좌측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것만이 통행 방향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보행 방향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므로 꾸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우측통행이 인간의 신체 특성과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김정룡(한양대 인체공학연구센터 교수)

교통운영체계 개선 3단계 추진

1단계 비보호 좌회전 확대
2단계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3단계 직진 후 좌회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교통문화 선진화가 이뤄진다. 교통 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돼온 좌회전 우선 신호가 직진 우선으로 바뀌는 등 교통운영체계가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된다.



7월부터 시작된 교통운영체계 개선은 신호와 도로를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을 기록했다. 미국(1.7명), 일본(0.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체, 정체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혼잡비용은 25조8천억원(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6.8퍼센트에 이른다. 이 중 자동차가 7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기가스 감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연간 6천2백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의 주요 원인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 및 도로운영체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우측보행으로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난 4월 29일과 5월 27일, 두 차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고 19개 후속조치 과제를 확정했다.

후속조치 과제는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점멸신호 확대 운영 △공휴일 서울시내 도로주차 허용 △보행자 작동신호기 확대 설치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 적응 기간이 필요치 않고 시행 절차가 간단한 4개 과제가 시행된다.

2단계에는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회전교차로 활성화 △우측보행 확립 △지정차로제 개선 △보행신호 점멸시작시점 조정 △교통섬 확대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좌회전신호 보완 △자전거 신호등 설치 등 9개 과제가 진행된다. 하나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법령 정비 등을 수반하는 과제들이다.

3단계에서는 시행을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장기 홍보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나 상당한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및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6개 과제가 추진된다. 교차로 대기시간 등 대부분의 교통운영체계가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경찰청 황창선 교통운영계장은 "좌회전 우선 신호는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 소통에 지장을 줘 지체와 정체를 초래했다. 또한 4색 신호등 사용으로 녹색일 때만 직진과 우회전을 허용하고 좌회전 신호를 따로 두다 보니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져 교통정체는 물론 과속, 신호위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계장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직진 후에 좌회전을 주고, 3색(적·황·녹색) 신호등 사용으로 녹색 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해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체증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경찰청이 앞장서서 교통운영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단계 과제들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7월 첫째주 일요일인 5일부터 도로에서의 주차가 허용됐다. 서울 도심에서 주차장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나들이객과 종교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휴일 도심 도로변 주차 허용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 곳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종로구 경복궁 주변 추사로와 조계사 앞 우정국로, 마포구 하늘공원 주변 난지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 여의도공원길, 강남구 도산공원 주변 언주로 등 총 55개소. 약 25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20개소는 7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도로변 주차가 허용됐다. 또 나머지 35개소는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고, 대상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휴일 도로주차 허용'은 서울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교통량이 줄어드는 전국 곳곳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해온 '점멸신호'는 현행 7천7백74개소(24.4퍼센트) 외에 3천7백54개소(누계 1만1천5백28개소·36.3퍼센트)가 추가 운영된다. 여기에 9월까지 5천6백93개소(누계 1만7천2백21개소·54.2퍼센트)가 더 포함될 예정이다.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전국 교차로 5천3백34개소(10.3퍼센트)에서 운영 중인 '비보호 좌회전'도 1천1백75개소(누계 6천5백9개소·12.5퍼센트)를 추가해 운영하며 9월까지 3천5백28개소(누계 1만37개소·19.3퍼센트)가 확대 운영된다. 특히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음에도 그동안 활용이 미미했던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5백48개소에 더 설치된다.

경찰청 김학역 교통기획담당관은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9월까지 2천9백45개소에 추가로 마련되면 소통 장애를 해소함은 물론 보행자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들은 고정적으로 운영되던 신호와 도로를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교차로 대기시간 단축과 보행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차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1천1백75개소 추가 운영한다. 또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5백48개소에 더 설치한다.

또한 황창선 교통운영계장은 "그동안 신호기가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비효율과 신호위반 심리를 유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교통량에 따라 신호와 도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소통과 주차편의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과속주행이 사라져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조치들을 도로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효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과제들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과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교통운영체계 개선안

1단계 ⇨ 7월부터 시행
- 점멸신호 확대 운영 공휴일 ● 서울시내 도로 주차 허용
- 보행자 작동신호기 확대 설치 ● 비보호 좌회전 확대

2단계 ⇨ 10월부터 시행
-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 회전교차로 활성화 ● 우측보행 확립
- 지정차로제 개선 ● 보행신호 점멸시작시점 조정
- 교통섬 확대 ●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 좌회전신호 보완 ● 자전거 신호등 설치

3단계 ⇨ 내년 1월부터 시행
-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 우회전 신호등 운영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사진 · 하성욱



황두진(黃斗鎭)

서울대 건축과 졸업
미 예일대 건축석사(M. Arch)
2007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

'한옥의 귀환' 이끈 건축가 황두진

한옥에 살어리랏다

한옥이 한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두진은 한옥을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과 멋스러움이 안목 깊은 절제미로 응축된 새로운 전형으로 창출해낸 건축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순회강연 등을 통해 해외에 한옥의 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옥이 요즘처럼 멋있는 건축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던가. 독특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구름문'쯤은 돼야 세련돼 보이던 TV 광고 배경이 격조 있는 한옥 풍경으로 바뀌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지로도 한옥이 자주 등장한다. 고급 한옥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더니 한옥호텔도 등장했다. 연구소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한의원과 치과 건물, 출판사 사옥, 갤러리, 공방, 식당 등 각종 형태로 진화 발전하면서 주목을 받는다. 사진기를 들고 나선 젊은이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은 무리 지어 한옥마을 골목을 누빈다.

그만큼 한옥을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30대 가운데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 건축의 테마로서 한옥의 미래를 밝게 한다. 한옥이 고루하고 남루한 구시대의 유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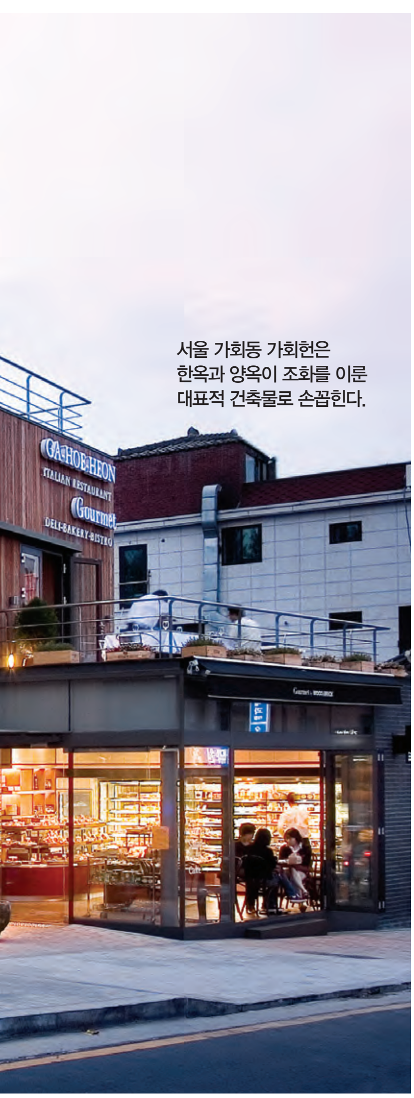


한옥의 미를 살린 춘원당한의원 박물관(왼쪽). 예스러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살림집 취죽당 내부.

미지를 벗어던진 것이다.

불편하고 유지 관리가 힘든 '한옥'이 이렇게 품격 있는 스타일의 상징으로 복귀하는 데 일조한 인물로 건축가 황두진을 꼽을 수 있다. 북촌에서도 각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옥 무무헌, 집운헌, 동인재, 쌍희재, 취죽당, 가회헌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특히 가회동 무무헌은 '한옥의 귀환'을 이끈 기폭제 역할을 하며 현대인이 좋아하는 편리함과 멋스러움이 안목 깊은 절제미로 응축된 새로운 한옥의 전형을 창출해냈다.

2001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열린책들 사옥에서 시작된 그의 건축 작업은 청운동, 가회동, 재동, 낙원동, 옥인동 등 사대문 안에 집중돼 있다. 황두진을 자칭 타칭 '동네건축가'라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옥을 문화재나 전통가옥이 아닌 한국 현대건축의 테마 가운데 하나로 보는 황두진에게 '동네'라는 개념은 각별하다.



서울 가회동 가회헌은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 건축물로 손꼽힌다.

미국 예일대 건축대학원 재학 시절 화두로 건네받은 '동네' 개념을 서울로 돌아와 건축 작업으로 풀면서 그는 주변의 것들에 주목했다. 우리 시대, 우리 땅, 우리 환경, 우리 생각, 우리 생활방식에 가장 어울리는 주거공간으로서의 한옥을 탐구하고 만들어갔다.

문화의 공간적 집약체로서의 한옥 이미지에 황두진은 스타일과 가치를 더했다. 한옥의 모습은 그가 몸을 만들고, 목소리를 다듬고, 영상을 연출하면서 더욱 더 세련되게 표현됐다. 그의 작업 결과에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외국인들은 환호했다.

그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엔 하버드대학원과 워싱턴 스미소니언미술관, LA 주립미술관, UCLA대학원, 시애틀 워싱턴주립대 등에서 미국 순회강연을 했다. 6월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옥의 건축미를 들려주었다. 그의 강의를 접한 미국 현지 건축가, 학자, 전문가들은 전통의 현대화 혹은 보편성을 획득한 지역색이라고 격찬했다.

그간 역풍도 거셌다. 한옥은 현대적 시설을 받아들이며 눈부신 변신을 거듭했지만, 한옥에 대한 사람들 생각은 요지부동 완고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건 한옥이 아니니 제발 짓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고, 허가 거부도 있었고, 한옥을 모르는 사람이 한옥으로 이름을 얻는다는 질시도 있었다.

문화의 공간적 집약체로서의 한옥 이미지에 황두진은 스타일과 가치를 더했다. 한옥의 모습은 그가 만들고, 다듬고, 연출하면서 더욱 더 세련되게 표현됐다. 그의 작업 결과에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외국인들은 환호했다.

'동네건축가'라는 표현만 해도 그렇다. 말 그대로 동네 건축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부르는 사람도 불리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 해도, 동네 건축가라는 것이 지역화가 곧 세계화의 경쟁력이라는 담론을 이미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해도, 그 한편에는 그래봤자 좁디좁은 동네 한구석에서만 통하는 동네 건축가라는 야유가 숨어 있다.

이에 대해 황두진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몰이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건 한옥의 복원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고 더 우리와 닮은 한국의 현대건축이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는 한옥은 우리 동네에 있어야 가장 돋보이지만, 이국땅에 갖다 놓아도 그 매력을 잃지 않는, 우리 시대를 사는 이들을 위한 주거공간이다. G

글 · 이정화(재단법인 예올 사무국장) / 사진 · 박영채



‘창공의 교통경찰’ 김포공항 항공교통관제사

하늘길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하늘길을 오가는 비행기들의 안전을 지키는 창공의 교통순경 항공교통관제사들. 한때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에서 지금은 국내선 대표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김포공항 관제탑에는 불철주야 생명의 등대지기가 되어주는 관제사들이 있다.

김포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사들을 만나기 위해 관제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진짜 멀어서 먼 것이 아니다. 하늘길을 오가는 많은 이들의 안전비행을 책임지는 관제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철통 보안 때문이다.

관제탑 구역 출입문에서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지난 다음 다시 철책을 통과해야 한다. 18층 건물 높이인 관제탑에 도착해서도 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모두 보안장치가 돼 있다. 관제탑 꼭대기의 관제실 역시 관제사들에게만 지급되는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신발 벗으세요.”

김광주(49) 김포항공관리소 관제통신과장이 관제실로 가는 마지막 문이 열리자 한 층 위 관제실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기 전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신발을 벗고 계단을 오르고 보니 모두 양말만 신은 채 근무 중이다.

“항공기 안전에 중요한 전자기기들이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다. 먼지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기 안전에 관제탑의 전자기기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방이 유리벽으로 둘러쳐져 활주로와 계류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관제탑 안. 비행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와 풍향풍속 모니터, 활주로상태 모니터, 비행기에 공항 정보를 자동 발송해주는 장비 등 많은 전자장비들이 벽을 따라 즐비하다. 그 앞에서 남녀 관제사들이 항공기 조종사, 공항 밖 관제를 담당하는 접근관제소 관제사들과 교신을 주고받으며 안전한 비행기 이착륙을 유도하고 있었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소가 운영하는 김포 관제탑은 3명씩 한조가 되어 5팀이 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 전담 근무자 2명까지 매일 낮 동안은 5명이, 야간에는 3명이



김포공항 관제탑을 지키는 관제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맨 왼쪽이 김선우 관제팀장. 이들은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발을 벗고 근무한다.

근무한다.

이날 근무조의 리더는 김선우(42) 관제팀장이다. 1996년부터 13년째 항공관제를 맡고 있는 베테랑 관제사다.

"김포공항을 드나드는 정기 항공기만 하루 3백여 대입니다. 기업체나 방송사 등의 헬리콥터, 경비행기 같은 부정기 항공기도 매일 50~1백 대 정도 드나들죠."

관제사들은 일단 다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김포공항의 경우 업무량도 만만치 않다.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드나드는 정기 항공기가 6백 대 정도로 이곳보다 많지만 그만큼 관제 인원도 많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과는 달리 김포공항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공항이 폐쇄되어 낮 동안에 항공기 이착륙이 집중된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러시아워'는 오전 9~10시, 오후 4~5시 사이이다. 공항이 폐쇄된 동안에도 군용항공기나 통과 항공기를 위해 관제 업무는 계속돼야 한다.

24시간 교대 근무… "공항 오가는 사람들 보며 보람 느껴"

"게다가 부정기 항공기들의 경우 계기비행(計器飛行)이 아니라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視界飛行)이 많습니다. 시계비행은 한층 더 복잡하고 세심한 관제를 해야 하므로 피로도가 더욱 심하죠."

이 때문에 한 관제사가 연속해 관제 업무를 하는 시간은 두 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규정상 최대 두 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관제 업무를 만만치 않은 일로 만들고 있다.

"간혹 항공기가 착륙을 앞두고 바퀴가 펴지지 않거나 착륙 때 충격으로 바퀴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관제탑은 초비상이다.

"바퀴가 펴지지 않을 경우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체 착륙에 대비해 활주로에 마찰계수를 줄여주는 포말을 뿌려둡니다. 착륙 중 비행기 바퀴가 부러지는 비상사태 땐 즉각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하죠."

김 팀장은 지난 2006년 6월 제주에서 김포로 오던 중 비행기 앞부분이 우박에 맞아 떨어져나간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유도했던 아찔한 경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항공기 조종석 유리창이 충격으로 깨져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시계(視界)가 제로인 데다 자동항법장치가 고장 난 상황에서 항공기 조종사와 교신만으로 승객 2백여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항공기를 사고 없이 착륙시키는 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무사히 활주로에 내려앉은 순간 김 팀장과 동료 관제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박수를 쳤다고 한다.



관제사들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각종 비행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내 눈앞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가슴 졸이면서 앞머리가 싹둑 잘려나간 사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열두 달, 24시간 조를 번갈아 근무하다 보니 관제사들에게는 '쉬는 날'이 공휴일이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관제사란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관세사'로 오해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항공기 조종석 유리창이 충격으로 깨져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조종사와 교신만으로 승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활주로에 내려앉은 순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박수를 쳤어요."

"업무를 마치고 관제탑에서 내려와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 바로 이분들이 오늘 내가 무사히 일을 마쳐서 이렇게 웃고 걸어 다니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잠시의 휴식 시간 동안 고충과 보람을 털어놓은 김 팀장은 다시 레이더 앞에 앉았다. 곧 오후 러시아워 시간이다. "한꺼번에 비행기들이 몰려들 때는 기계가 아니라 숙련된 스킬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대로 그는 오늘도 능숙하게 러시아워의 혼란스런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신개념 노인 일자리 '투어 토커' 아시나요

노인들이 경험으로 쌓은 삶의 지혜와 현장에서 익힌 살아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여행정보를 컨설팅하고 가이드하는 '투어 토커'가 그것이다.



조영철 기자

투어 토커는 지역특산물 직거래 서비스 지원, 관광가이드, 지역축제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사전정보는 필수라 할 수 있다. 꼭 가봐야 할 관광지며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숙박지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역특산물 직거래 서비스나 지역축제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들에게 살아 있는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투어 토커(Tour Talker)'다.

투어 토커 사업은 여행객에게는 꼭 필요한 실시간 여행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는 관광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의 노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 투어 토커가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 일자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경남 남해군, 민간기업과 함께 노인 일자리 투어 토커 시범사업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군은 13명의 노인을 선발해 6월 10~12일 참여노인 직무교육을 마쳤고, 이들은 6월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투어 토커 사업은 여행객에게는 꼭 필요한 실시간 여행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는 관광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의 노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거기다 지역 행사나 명소, 식당, 숙박업소 등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 토커가 된 노인은 지역특산물 등 직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관광가이드를 맡거나 지역축제를 안내하게 된다. 이 경우 월 약 60만~75만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은 투자 비용이 거의 없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지역 노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모두 1천4백43억원을 쏟아 총 19만6천 개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 분야 일자리로는 17만4천 개를 보급한다. 이 일자리는 아동안전 보호, 문화재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분야 일자리로는 2만2천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일자리는 아파트 택배, 주유원 등 노인들이 일하기 적합한 틈새시장형 모델들이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02-2023-8168)
한국노인인력개발원(02-6007-9152)


4대강 살리기
제13화
앗!
풍덩
글 이연수 그림 이호
뾰로롱~
헉.
이 호미가 네 호미냐?
도리 도리
이 호미가 네 호미냐?
도리 도리
홱
이 호미가 네 호미냐?
맞구먼유!
아니, 그렇다면 지금껏 여기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냐!
움찔
물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비료의 질소와 인산 성분이 흘러들어 강물의 부영양화가 초래됨을 모른단 말이냐! 또한 네가 뿌린 제초제나 살충제와 같은 농약은 수중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느니라!
질소
인산
쯧쯧
내 정직한 너를 기특히 여겨 세 자루의 호미를 모두 주려 했거늘….
됐슈.
안 그려두 정부에서 농지 보상비 두둑하게 받았슈. 이것만 캐서 나가려던 참이유.
무슨 신령님이 여태 강변 농지를 생태습지로 복구한다는 소문도 못 들었대유? 신문 좀 읽구 살어유!
풍덩

연합



부산 고신대 야외광장에서 열린 장기기증운동 캠페인에 참여한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족 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앞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뇌사추정 환자 신고제도로 신속한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심장 종양 후유증으로 심근이 손상된 김모(42) 씨. 종합병원에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해 놓았지만, 언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을지 초조하기만 하다. 뇌사 기증자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생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했던 뇌사자라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김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5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이 사망 전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도 기증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망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족이 장기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기증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으로는 장기기증 동의를 가족 또는 유족 선순위자 두 명에게 받아야 하지만 개선안은 선순위자 한 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찾아 장기기증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뇌사추정 환자 신고제도가 그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연간 뇌사추정 환자는 약 5천명. 하지만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지난해 3백91명에 불과했다. 이에 뇌사추정 환자의 별도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의 6~10명(전문의 3명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축소해 위원회 소집에 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뇌사자의 장기를 손상 전에 신속히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한 정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이 맡아온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및 관리 창구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식 대기자 등록 및 신체검사가 전문성을 요하는 데다 알선, 소개 등 불법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 관리 의료기관으로 일원화

이번 조치로 국내 장기기증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백56명. 2000년의 52명에 비하면 5배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 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백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3.1명으로 스페인의 35.1명, 미국 25.5명 등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이표희 사무관은 "장기기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신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지적하며 "유족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휴식이 필요해



침묵의 침대에 누워라.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자신을 느껴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아! 너무 벅차구나. 휴식은 나에게 있어 한없는 충만을 의미한다.
– 라즈니시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앞으로는 장애인이 개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공받게 됐다. 사진은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의 모습.

장애 보조기구도 이젠 맞춤형시대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 개소

음성인식 TV 리모컨, 휴대전화가 달린 개조 휠체어….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들을 맞춤 지원해주는 센터가 생겼다. 장애 정도와 욕구에 맞게 제작된 '맞춤형 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뇌성마비 환자인 이재민(가명) 씨는 상지(上脂 · 윗팔과 손)와 하지(下肢 · 다리와 발가락)가 경직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동 휠체어도 턱으로 겨우 조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휴대전화 사용도 어렵고, 휠체어에 앉아 이동할 때면 앞으로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이런 고충을 겪던 이 씨는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씨의 전동 휠체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와 휴대전화 거치대가 설치됐다. 현재 이 씨는 입을 이용해 스스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도 문제없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가 6월 2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1층에 문을 열었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상담실, 평가실, 휠체어 및 이동기기실, 일상생활 보조기구 지원실, 보조기기 개조 제작실, 동작 분석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로봇이나 휠체어 등을 직접 체험하고 구경해볼 수 있는 상설 전시체험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명현 사무관은 "같은 뇌성마비라고 해도 단일한 증상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구가 달라져야 한다. 또 취학 전, 성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와 활동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서도 필요한 보조기구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에 맞춰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제공해주자는 것이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한 예로 조용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큰 음성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제공하게 되면 주위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곳을 찾으면 먼저 상담을 통해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를 진단받게 된다. 이어 평가실에서는 체압측정 장치 등 과학 장비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개별 공학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료, 치료, 복지, 공학 등)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

시범 지원 대상 1백80명… 점진적 확대 예정

현재 지원 대상은 모두 1백80명. 국립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70명과 지역사회의 장애인 1백10명 등이다. 시범사업소는 이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매뉴얼화해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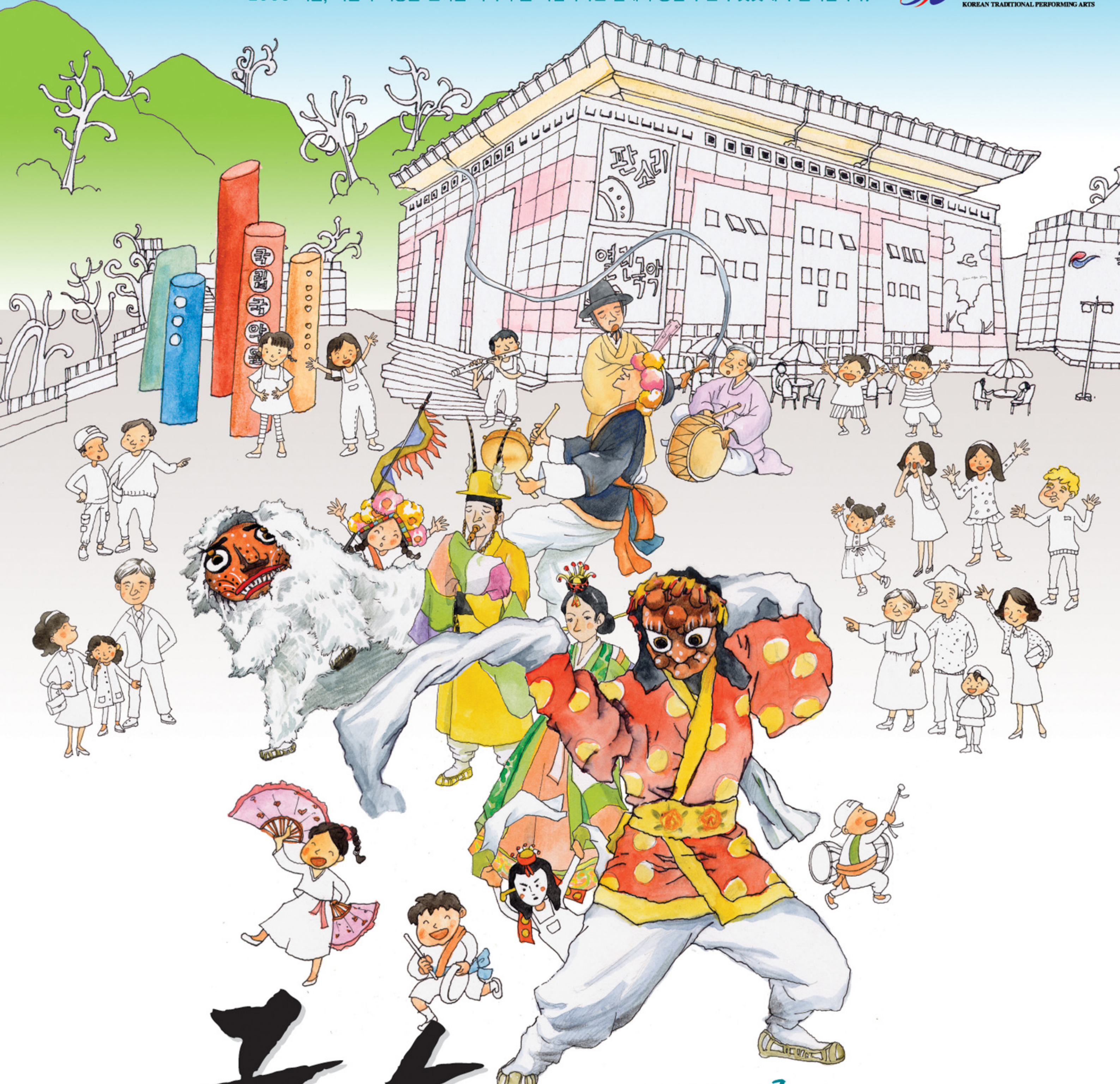
시범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국립재활원 이용자인 경우 담당 의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www.rtc.nrc.go.kr)에 접속해 의뢰지를 내려받아 사례관리팀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 지역사회 장애인의 경우는 대상 선정 여부와 상담시간 등을 미리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G

글 · 차선아 객원기자

문의 · 국립재활원 02-901-1953

2009 여름, 나눔과 희망을 전하는 국악의 숲 국립국악원 릴레이 공연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2009 여름, 국악의 숲 릴레이 공연

국악을 국민 속으로

NCKTPA Summer Concert Series:
Bringing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to the People

7월~8월

국악을 국민 속으로 주최_국립국악원
- 7. 1(수) 15:00 서울역
- 7. 21(화) 15:00 수원역
- 7. 24(금) 16:00 센트럴시티
- 8. 15(토) 20:00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 8. 18(화)~19(수) 16:00 인천국제공항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주최_국립국악원
- 7. 3(금) 10:30, 12:30 양주문화예술회관
- 7. 16(목) 11:00, 14:00 안성문화예술회관
- 8. 26(수) 13:00, 16:00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박물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국악원" 주최_국립민속국악원
- 7. 3(금) 14:00 충청북도 보은 수정초등학교

우면산자락 "초록음악회" 주최_국립국악원
- 7. 5(일) 20:00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 8. 2(일) 20:00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청소년을 위한 국악공연 "국악이야기" 주최_국립남도국악원
- 7. 8(수) 13:30 순천 풍덕중학교

창경궁의 아침 주최_국립국악원
- 7. 11(토), 7. 18(토), 7. 25(토), 8. 15(토), 8. 22(토), 8. 29(토) 07:30 창경궁 명정전 뒤 회랑

근로자와 함께하는 "국악! 희망과 나눔" 주최_국립남도국악원
- 7. 14(화) 15:00 목포 고려조선소 야외광장

찾아가는 국악원 주최_국립국악원
- 7. 17(금) 19:30 서천문예의전당
- 7. 18(토) 19:30 고창문화의전당
- 8. 20(목) 19:30 울진문화예술회관
- 8. 21(금) 14:00 강릉효도마을 요양원강당

생활 속 우리 문화 햇살 주최_국립부산국악원
- 7. 22(수) 15:00 부산의료원
- 7. 29(수) 19:00 국립김해박물관
- 8. 14(금) 19:00 국립경주박물관

춘향골 열린음악회 주최_국립민속국악원
- 8. 1(토), 8. 22(토) 20:00 남원관광단지 분수대광장

어린이창극 "깨비 깨비 도깨비" 주최_국립민속국악원
- 8. 7(금) 19:30 충청북도 보은 도깨비페스티벌 야외특설무대
- 8. 14(금) 19:30, 8. 15(토) 14:00 태백문화예술회관
- 8. 28(금) 11:00, 8. 29(토) 15:00 금산다락원

백구가 부르는 진도아리랑 주최_국립남도국악원
- 8. 26(수) 8. 27(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속 국악 채우기 주최_국립민속국악원
- 8. 29(토) 19:00 국립전주박물관

주최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후원 동아일보 국악방송 KTV 한국정책방송
협찬 피죤 정관장 AUCTION & skype

주최별 공연 문의처 국립국악원_02)580-3300~5 www.ncktpa.go.kr 국립민속국악원_063)620-2323~8 www.ntmc.go.kr 국립남도국악원_061)540-4031~4 www.namdo.go.kr 국립부산국악원 _051)811-0040~1 www.ncktpab.go.kr


미디어법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난항인 가운데…
아놔~ 미디어법? 또 나쁜 법을 통과시키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몰라!
뭔데? 말해봐~
그게… 부자가 방송을 소유하고… 난 돈이 없을 뿐이고….
주절 주절 주절 주절
됐고! 내 친구 이모네 동창의 미니홈피 일촌이 잘 알고 있대. 가보자!
-.-;
미디어대학 미디어학과
우리가 온 이유는….
아, 네~ 제 먼 친척 고모의 사촌께 들었어요.
뭐… 뭐냐?
미디어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면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 참여가 제한돼 대주주가 될 수 없어요~.
응?
오~


혹시 미국의 NBC나 독일의 RLT를 아시나요?
NBC
완전 유명한 방송국이잖아요.
NBC는 세계적인 거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 합작해서 탄생했어요.
세계 미디어산업은 벽을 허물고 대규모 방송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미디어 관련법안 통과 시 3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생긴대요.
아~
음...
그런데요~ 방송에 거대자본이 참여하면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를 여론 독과점문제는 '여론 집중도 조사' 제도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하~ 그렇다면 안심~
소심하기는~
근데 이번 법안이 방송을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넘기려는 의도라는 말이 있던데?
또 대기업이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해 선정적, 상업적 콘텐츠를 남용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우선 방송사는 허가제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서 많은 통제와 규제를 받죠.
또 대기업이 단기간 수익을 위해 그런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선정적인 콘텐츠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제
방송
규제
게다가 시청자단체들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방송
시청자단체...
음,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은
뒤적
뒤적
뒤적



선(先)허용 후(後)규제 정책으로 대응~.
뒤적 뒤적 뒤적
맞아요. 발전의 가능성조차 열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능동적인 대처죠.
흠~ 그런데 신문법 어쩌고 하던데… 그건 뭐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해요. 이 벽이 허물어지면 뉴스 콘텐츠의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해져요.
방송
신문
흐음, 규제를 없애 언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음
이해가 빠르시네~
아…아직 아니야!!
아… 그것이 궁금해!
이글 이글
으르르릉
그러니까 좀… 앉아서 얘기하라고…
아, 창피해.
바로 IPTV법!
쿠 궁
외우느라 고생했다.
이미 IPTV시대인데 아직 잘 모르시다니, 실망인데요!
고오오오 오오오오~~
실망이래…
울지 마…
IPTV법 개정안은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IPTV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게 이번 IPTV법 개정안의 핵심이죠!
퍽
그럼 이제 외국처럼 대작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아는 척~!
꽁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아세요?
응?!
악플 때문에
고통 받은 연예인도
있었는데….
….
몰라요?
몰라요!
알려줘요!
끄
현행법은
피해자 고소가 없이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거죠.
흠~
아하~
음~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요?
옳소!
표현의 자유!
아뇨! '본인 확인제' 랍니다.
게시판 같은 곳에 글을 쓸 때
최초 1회만 입력하면
게시판에 쓰던 아이디나
닉네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잠깐!
그럼
내 블로그나
미니홈피
글까지도
검사?
팟
사생활 침해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번 법안은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의 근거
없는 비방과 언어폭력에 대한
사전방지 차원이고요.
블로그 등 개인적인 글은
문제없어요~.
휴~
정말 인터넷 세상의
정부 비판을 사전
감시하는 그런 법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e메일이나
블로그, 카페의
게시판 등은
신문법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런 건 안 챙겨주셔도….
꽁
내려놔!
IPTV
이 사람이….

조선왕릉 40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선왕조 5백년, 세계를 홀리다

유네스코 위원회가 조선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번 유산 선정은 6백년간 이어져온 제례, 보존 노력 등 무형자산까지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왕릉 40기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서울 성북구 소재).

조선왕조 5백년 왕실문화가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시대 왕릉 40기 전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종묘, 창덕궁, 석굴암 등에 이어 9개가 됐다.

조선왕조가 한반도에 남긴 왕릉은 총 42기. 태조부터 순종까지 즉위했던 27명의 왕 이외에 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으나 나중에 왕으로 추존(追尊)된 경우와 왕비의 무덤까지 '왕릉'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은 주로 수도권(동구릉, 광릉, 태릉 등)과 경기 여주(영릉), 화성(건릉, 융릉) 등에 분포돼 있고, 강원 영월의 장릉도 있다. 제릉(태조비 신의황후의 능)과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능) 등 2기는 북한에 있다.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는 왕릉 밀집지역인 경기 구리시가 2003년부터 추진해오다 문화재청이 2004년 전국의 조선왕릉에 대한 일괄 등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08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문화유산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

국가 이미지 높이고 해외 관광객 증가 기대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이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을 갖추고 있어 동아시아 전통 묘제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등재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6백년 이상 제례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고, 능터 잡기, 일꾼, 경비, 자재 등을 꼼꼼히 기록한 자료의 보존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나서서 조선왕릉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등 지역공동체도 함께 왕릉을 보호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왕조에서 재위한 주요 왕들의 무덤이 모두 남아 있으며, 거의 도굴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유네스코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인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제례공간(종묘)과 왕실생활공간(창덕궁)에 이어 사후세계공간(조선왕릉)까지 세계문화유산이 됨으로써 세계가 조선왕조 유산의 우수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번 등재 결정은 우리의 건축과 조경양식은 물론, 제례의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유례없는 대규모 세계유산군(群)을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해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됐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유산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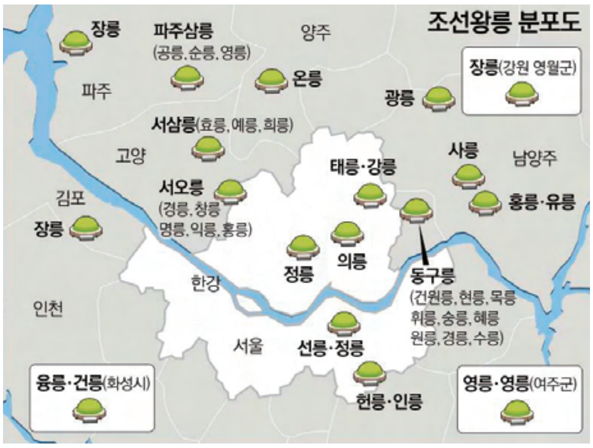
인터넷 사진앨범 사이트에 조선왕릉 답사기와 수천 장의 왕릉 사진을 올리며 우리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온 박원연 씨는 "조선왕릉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사건"이라고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해 7월 12일까지 모든 조선왕릉에서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강릉, 서삼릉의 효릉, 동구릉의 숭릉, 남양주의 사릉, 파주 장릉 등은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보존과 관리'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승인과 함께 보존계획 마련 등의 조건도 요구했다. 일부 훼손된 능역의 원형을 보존하고 개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관광계획과 안내해설 체계를 갖출 것 등을 함께 권고한 것이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안내 · 문화재청(www.cha.go.kr)
조선왕릉(royaltombs.cha.go.k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우리 문화재

문화재	등재 연도	선정 이유
석굴암, 불국사	1995	석굴암은 조영계획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녔다.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인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히 보관할 수 있도록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이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종묘	1995	제왕을 기리는 유교 사당의 표본.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다.
창덕궁	1997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
수원 화성	1997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한 독특한 성. 약 6킬로미터에 이르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한국의 건축물과 불교 발달에 있어 중요한 많은 유적과 기념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2천~3천년 전의 무덤과 장례의식 기념물로서 선사시대 문화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당시의 기술과 사회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수많은 측화산과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동굴, 다양한 희귀생물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구의 화산 생성과정 연구와 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물, 지질 등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으로 만나는 조선왕릉

박원연 씨 '앨범쟁이의 디지털 시대'

'홍릉, 정릉, 서오릉…' 그저 '동네 이름' 정도로만 생각했지, 내 집 가까이 늘 있어왔던 왕릉이 세계 학계가 인정할 정도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적잖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아이들 손잡고 인근 조선왕릉에 찾아가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 사이트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며 틈틈이 우리 문화유적지를 답사, 수천 장의 사진과 해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누리꾼 박원연 씨의 '앨범쟁이의 디지털 세계(dmook.kr/wony park)'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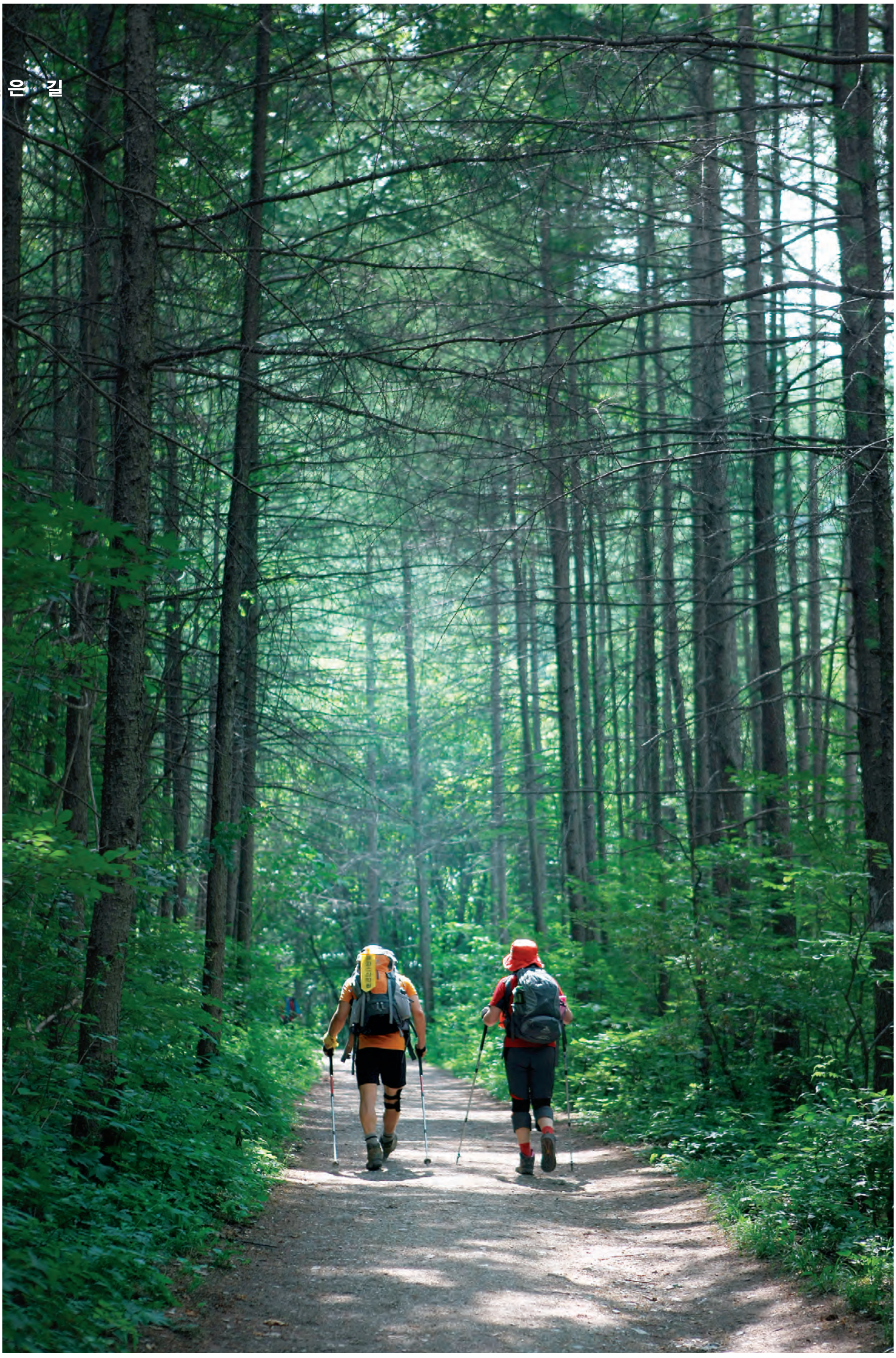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박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이라도 더 조선왕릉을 방문하고,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이트 콘텐츠 중 '조선왕조 왕릉 탐사'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자. 박 씨가 직접 찾아가 촬영한 3천7백 장의 왕릉 및 주변 문화재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에게는 비공개인 서울의 강릉 등도 힘겹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 촬영했다고 한다.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누락된 광해군묘 등 기타 왕실 가족의 묘와 묘역 인근 문화유적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왕릉을 찾아가는 길 안내, 묘역 안내도, 조선 왕실의 역사, 묘역 조성 내력, 문화재적 가치 등 박 씨가 답사를 통해 발굴한 정보는 물론 인터넷 및 관련책자를 뒤져가며 추가 조사한 자료가 함께 올라 있다.

"예산 부족으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화재예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부 왕릉이 비공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관련 예산이 확보돼 모든 왕릉이 공개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박 씨의 바람이다.





검룡소 초입의 낙엽송 숲길.

태백 두문동재~검룡소 숲길

태고의 신비한 숨결 따라 천상의 꽃길을 걸었네

해발 1천2백68미터의 두문동재는 분수령(分水嶺)이다. 이 고갯마루에 떨어진 빗방울이 동쪽으로 구르면 낙동강이고, 반면에 서쪽으로 떨어지면 한강물이 된다. '싸리재'라고도 불리던 이 고개는 매봉산(1천3백3미터)에서 금대봉(1천4백18미터)과 은대봉(1천4백42미터)을 거쳐 함백산(1천5백72미터), 만항재(1천3백30미터), 태백산(1천5백67미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한 허리를 이루기도 한다.

강원 정선군 고한읍과 태백시 화전동을 잇는 38번 국도도 한동안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2001년과 2004년에 두문동재1, 2터널이 완공된 뒤로 두문동재 정상을 넘는 옛 구간은 차량 통행이 뜸해졌다. 주말이나 휴일이 아니면 인적마저 뜸한 편이다. 차량의 소통과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곳은 눈에 띄게 건강해진다.

두문동재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 유난히 상쾌하다.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때 이른 무더위도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대는 고갯마루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서다.

두문동재 북쪽에는 금대봉이 우뚝하다. 이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는 1993년 환경부에 의해 '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생태계보존지역 지정에 앞서 실시된 생태조사에서는 참꿩의다리, 금강제비꽃, 털개불알꽃, 홀아비바람꽃 등 한국 특산식물 15종과 털댕강나무, 바이칼바람꽃, 나도바람꽃, 혹쐐기풀 등 희귀식물 16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참매, 새매, 검독수리 등의 천연기념물 조류와 도마뱀,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같은 양서류의 집단서식지도 발견됐다.

이처럼 생태계가 잘 보존된 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존지역을 찾아가는 트레킹은 두문동재 정상을 출발해 금대봉, 고목나무샘, 분주령, 검룡소 등을 거쳐 안창죽마을로 내려가는 코스가 무난하다. 총 길이가 7.4킬로미터인 이 코스는 두문동재 정상까지 자동차로 올라간 다음부터 줄곧 평탄한 능선길과 완만한 내리막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걷기에 딱 좋다.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서너시간만 느긋하게 걸으면 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존지역의 웅숭깊은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두문동재 정상에서 금대봉 아래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따라간다. 그 길에서부터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지천이다. 돌나물과 흡사한 기린초, 미나리의 삼촌쯤 되는 미나리아재비, 범종 모양의 초롱꽃, 꽃송이마다 꿀을 가득 담은 꿀풀 등이 풀숲 곳곳에 소담스레 피었다. 금대봉 북쪽 기슭에는 시야 훤한 초원이 펼쳐진다. 무성한 풀밭에는 범꼬리 군락지가 형성돼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그 사잇길로 걷노라니 마치 천상의 꽃길을 걷는 듯 황홀하다.

범꼬리 군락을 지나 나직한 고갯길을 하나 넘어서면,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덕산이 손에 닿을 듯한 거리로 다가온다. 길 주변의 양지바른 풀숲에는 가느다란 줄기에 작은 꽃이 무수히 달린 산꿩의다리와 한국 특산식물인 둥근이질풀도 간간이 눈에 띈다.

두문동재 정상에서 금대봉 아래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따라간다. 그 길에서부터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지천이다. 금대봉 북쪽 기슭에는 시야 훤한 초원이 펼쳐진다. 무성한 풀밭에는 범꼬리 군락지가 형성돼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그 사잇길로 걷노라니 마치 천상의 꽃길을 걷는 듯 황홀하다.

널찍한 임도를 벗어나 조붓한 숲길로 들어선 지 5분 만에 고목나무샘이 눈에 들어온다. 이 샘터를 처음 찾은 5년 전쯤에 비해 샘물의 수량은 줄고 물빛은 탁해 보였다. 금대봉과 매봉산을 잇는 백두대간 능선의 북쪽에 위치한 이 샘은 한강 수계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한강의 공식 발원지인 검룡소 대신에 이 샘을 진짜 발원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고목나무샘을 지날 즈음부터 숲길은 산비탈의 경사면을 가로지른다. 길은 비좁고 숲은 울창하다. 온갖 활엽수와 다래, 머루 등의 덩굴식물이 빼곡해서 손바닥만한 하늘도 보이지 않을 정도다. 숲 바닥에는 수십,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부엽토가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인 매봉산 능선에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





1 하루 2천 톤의 지하수가 솟아나는 검룡소.
2 구와우마을에 들어선 태백고원자생식물원의 해바라기밭. 8월 중순 풍경이다.
3 한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울창한 검룡소 주변의 활엽수림.



두껍다. 그 덕에 양탄자를 밟는 것처럼 푹신한 감촉이 고스란히 발바닥에 전해온다.

광활한 활엽수림 사이사이에는 낙엽송 숲이 형성돼 있다. 대부분 예전에 산골 주민들이 불을 놓아서 농사를 짓던 화전(火田) 터에 조성된 숲이다. 낙엽송 숲은 척박해서 다른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썩은 부엽토를 자양분 삼아 산제비난, 여로, 하늘말나리 등이 곱게 피어 있다.

쭉쭉 뻗은 낙엽송 숲과 아름드리 참나무 숲을 지나서 다시 능선길을 얼마쯤 걸으면, 인진쑥에 뒤덮인 초원지대로 들어선다. 이 쑥대밭은 분주령(1천80미터)까지 이어지는데, 걸어가는 내내 진한 쑥 향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쑥 향기 짙은 풀밭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곤함이 모두 사그라지는 듯하다.

매봉산 능선 풍력발전기… 여름 풍경이 가장 아름다워

분주령에서 검룡소 입구까지는 줄곧 내리막길이다.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뿐해진다. 걸음에 가속이 붙으니 길가에 널브러진 산딸기와 오디(산뽕나무 열매)에도 손이 가질 않는다. 분주령에서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검룡소 갈림길을 만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작은 나무다리와 평탄한 낙엽송 숲길을 지나 15분만 걸어가면 총길이가 5백14.4킬로미터에 이르는 한강의 '공식' 발원지인 검룡소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내내 섭씨 9도를 유지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씩 솟아난다고 한다.

검룡소에서 태백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서는 삼수령(피재)을 지나게 된다. 이 고갯마루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백두대간의 봉우리들 중 하나인 매봉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산의 북사면에는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이 들어서 있다. 울창했던 천연림을 사라지게 만든 채소밭이지만, 그 풍광만큼은 퍽 이국적이어서 관광객들과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태백시가 매봉산 해발 1천2백72미터에 8기의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뒤로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일년 열두 달 중 어느 때에 찾아가도 이국적인 풍광을 보여주지만,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여름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

매봉산 진입로가 시작되는 피재 아래의 해발 8백50미터 지점에는 구와우마을이 있다. 태백시 용연동에 속하는 이 마을에는 태백고원자생식물원(033-553-9707)이라는 사설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다. 총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여 평)의 식물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바라기 꽃밭이 조성돼 있다. 숱한 고봉들이 중첩한 백두대간 고원지대에 수만 그루 해바라기가 만발한 광경은 소피아 로렌 주연의 영화 〈해바라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진풍경이다. 이곳의 해바라기 꽃밭은 8월 15일 전후에 절정기를 구가한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두문동재 아래 고한에는 하이원호텔(033-590-7700), 강원관광펜션(033-592-5912), 테마파크모텔(033-591-0804) 등이 있다. 태백 시내에도 이스턴호텔(033-554-0001), 메르디앙호텔(033-553-1266), 이지스모텔(033-553-9980), 패스텔모텔(033-553-1881) 등의 숙박업소가 많다.

맛집 태백 시내의 경성실비식당(033-552-9356), 시장실비식당(033-552-2085), 황지실비식당(033-552-4458) 등에서는 육즙 많고 고소한 태백한우의 진미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이 밖에 태백 시내의 맛집으로는 너와집(한정식 · 033-553-4669), 승소닭갈비(033-553-0708), 초막칼국수(갈치, 고등어찜 · 033-553-7388) 등을 꼽을 수 있다. 고한 읍내에서는 낙원식당(한우구이 · 033-591-2510), 고모네식당(오삼불고기 · 033-591-2069) 등이 괜찮다.



가는 길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제천나들목→제천우회도로(5번 국도) 송학나들목(38번 국도)→영월읍→석항삼거리(직진)→사북→고한→두문동재

대중교통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고한읍으로 간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두문동재 정상까지 간다. 고한에서 두문동재 정상까지의 택시비는 1만2천원 선. 안창죽마을의 검룡소 주차장에서 태백 시내로 나가는 시내버스는 하루 2회에 불과하다. 태백 시내의 택시를 불러 타면 요금이 대략 1만6천원쯤 나온다. 택시를 타려면 고한개인콜택시(033-592-5050), 태백개인택시(033-552-4747)에 문의. 주말이나 휴일에는 승우여행사(02-720-8311), 옛돌답사여행(02-953-1313), 느낌여행사(02-777-9881) 등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도 된다.





금대봉 아래의 초원에 무리 지어 꽃을 피운 범꼬리.

생생한 현장 속엔 발로 뛰는 공무원 있다

KTV 정보와이드 '정책, 현장을 가다' 코너 신설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을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KTV의 '정책, 현장을 가다'.
나라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확인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KTV

KTV 정보와이드 신설 코너 '정책, 현장을 가다'에 지난 6월 23일 소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단' 활동.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6월 1일 일부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간판 프로그램인 '정보와이드' 역시 일부 코너를 신설했는데 그중에서도 정책이 이뤄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정책, 현장을 가다'가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책, 현장을 가다'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지 알아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단' 활동이 소개됐다. 경제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이나 동네골목상권 같은 지역경제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진행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가 희망이다'란 기치를 내건 정부의 대표 사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장감 있게 보여주었다.

방송은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공원 둔치 조성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1백여 명의 희망근로 노동자들을 카메라에 담아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단 이인재 팀장을 스튜디오에 초청해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팀장은 "이처럼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책 구상에 도움이 된다. 현장을 체감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책, 현장을 가다'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찾아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6월 30일 방송에는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김상구 과장의 활동이 소개됐다. 김 과장은 주요 문화재를 돌며 화재진압시설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책, 현장을 가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왔다. 6월 2일 '안전한 밥상, 우리가 책임진다'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이원희 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고기열 과장 등이 출연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G 글 · 정지연 기자

정책, 현장을 가다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15분

개인과 역사의 장구한 파노라마를 만나다

올해의 작가 2009 서용선展

일시 ~9월 20일(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 ·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중앙홀
관람료 3천원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서용선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인간의 내밀한 삶을 작품에 담아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09년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서용선씨(58 · 사진)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시다.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했던 서 작가는 지난해 정년을 10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돌연 사표를 내고 경기도 양평의 작업실로 칩거해 들어간 괴짜 작가다. 올해의 작가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5년부터 마련한 전시로 매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 크게 기여했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향후 한국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작가를 전년도에 선정해 발표한다.

서 작가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의 실존적 고통과 팽창하는 도시의 공간적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을 반추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태고의 마고할미에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얼굴에 이르기까지, 유장하게 흘러온 역사 속에서 작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로 각인된 대목들을 장대한 파노라마로 펼쳐놓는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대표작을 포함한 회화 50여 점, 높이 8미터에 달하는 신작 대형 조각을 포함한 조각 10여 점, 조각 작품을 탄생시키는 산고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드로잉 1백20여 점을 총망라했다. 서 작가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삶의 공간은 연속되어 있다. 그것은 기억을 통해 연결된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역사는 기억과 그것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역사와 신화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 망각은 인간에게 치유와 동시에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작가는 모더니즘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형상과 서술적인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작품을 창조해내려는 회화적 과제에 도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연극 '한여름 밤의 꿈'

일시 ~8월 2일(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 · 일요일 오후 3시, 7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02-3672-8070 www.sac.or.kr



1995년 여름 예술의전당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이 14년 만에 바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시 흥행 주역들도 같은 배역으로 함께한다. 이문식, 안내상, 홍석천 등 세 명의 배우와 연출을 맡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최형인 교수가 그들이다. 또한 당돌하고 발랄한 매력의 연기자 김효진과 가수에서 배우로 돌아온 최진영도 합류한다. 이들의 연극무대 도전이 기대된다.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일시 ~8월 16일(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수 ·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9시(월요일은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552 www.museum.go.kr



'차마고도'란 서남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티베트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목문화권과 중국 남부의 차로 대표되는 아열대 상록수림지대를 잇는 인류 최고의 육상 교역로다. 이번 전시는 차마(茶馬)를 교역하는 사람들인 마방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인생 여정에 맞춰 6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기획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미슐랭 가이드와 자갯, 그리고 과학자 린네 생각

한식 세계화는 한식당 세계화로 시작해야

음식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왜 우리나라에는 미슐랭(Michelin) 가이드나 자갯(Zagat) 서베이와 같은 훌륭한 레스토랑 가이드북이 없냐는 것이다. 사실 한식 세계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의 하나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생각하면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한식 세계화는 한식당 세계화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식을 경험하는 것은 가정집이 아니라 한국 식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믿고 참고할 만한 레스토랑 가이드북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인사동과 명동의 식당가를 기웃거리는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 잡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유럽 사람들과 미국인, 중국인들에겐 좋은 안내서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좋은 레스토랑 가이드북은 무엇보다 분야별로 랭킹을 매길 만큼 다양하고 많은 레스토랑과 이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비평가와 시스템, 그리고 이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돼야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좋은 식당이 별로 없다. 우리 식당들은 너무 자주 바뀐다. 한자리에서 수십 년 넘게 자리를 지키는 식당이 없다.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식당이라고 해야 하동관이나 용금옥, 우래옥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레스토랑 개업 기사가 실리지만 1, 2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 있는 식당은 절반이 넘지 않는다. 그러니 눈여겨볼 만한 식당이 문을 열어도 그에 대해 평가하는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비하면 가까운 일본은 어떠한가. 1백년이 넘는 라멘집과 스시집, 장어구이집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음식과 식당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이를 알리는 좋은 안내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음식과 와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레스토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자와 칼럼니스트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없을까. 여기서 음식문화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풀어야 할 더 큰, 숨은 어려움 하나를 고백해야겠다.

바로 우리나라 음식과 식당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 음식이 아닌 경우야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중식, 일식 등으로 아쉬운 대로 겨우 가닥을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 음식은 어떻게 분류할까. 갈비집, 곱창집, 만두집, 국밥집, 고깃집, 백반집, 매운탕, 설렁탕과 갈비탕, 간장게장과 낙지찜, 김치찌개… . 횟집과 일식집, 스시집은 어떻게 다른가. 고깃집과 갈비집은? 설렁탕과 고깃집의 관계는? 갈비탕과 갈비집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나?

자갯 서베이 도쿄판은 일본 음식을 복(鰒), 오뎅, 소바/우동, 덴푸라, 우나기(장어), 스시, 돈가스, 전통 일식, 샤브샤브, 야키도리, 야키니쿠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식점은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분류하기 아주 힘들다.

우리 음식의 바른 영어 표현과 체계적 분류가 필수

매번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린네(Carolus Linnaeus)가 생각난다. 인류사에 남을 위대한 과학자들만 열거해도 한 권의 인물사전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나는 린네를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으니까. 당대의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린네의 특징은 일관성, 질서, 단순성, 그리고 시의적절함이었다. 그는 1만3천여 종의 식물과 동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기록을 남겼다.

지렛대를 받쳐줄 지렛목을 놓아준다면 지구라도 들어보이겠다는 아르키메데스의 호언처럼 나는 누군가 명쾌한 분류만 해준다면 좋은 가이드북을 만들 수 있겠다고 탄식한다.

우리 음식의 바른 영어 표기와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류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한식 세계화 추진본부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G

글 · 손일영(칼럼니스트)



미슐랭 가이드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그룹인 미슐랭이 1990년에 창간해 매년 발간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안내서. 프랑스판과 유럽판, 미국판 등에 이어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도쿄판이 발행되고 있다.

자갯 서베이
1979년 미국에서 자갯 부부가 창간한 레스토랑 평가서. 전 세계 70여 개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언어로 발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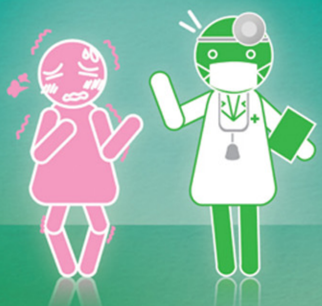
버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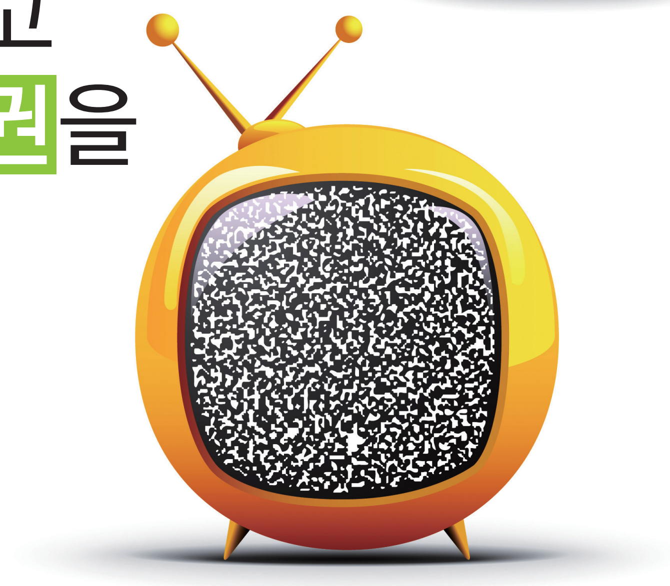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법,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신문·방송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 산업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칸막이 규제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자 유입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경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세금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 한해 3,000억원 이상이 쓰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진입장벽을 허물어 신규투자를 늘리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신문 ·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사 지분은 20%로 제한되어 지상파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MBC와 KBS-2TV 민영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OECD 30개국 중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방송채널수가 늘어나면 정부 장악은 불가능해집니다.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현재 방송은 지상파 TV 3사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왜곡제작 프로그램과 불륜 드라마가 넘쳐나도 국민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 수를 늘려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국민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입니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듭니다.

30년 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